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强 容 培

中國의 國防政策이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對應戰略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 National Defence Policy Affected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2007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林 慶 根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强 容 培

中國의 國防政策이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對應戰略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 National Defence Policy Affected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위 論文을 國際安保戰略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林 慶 根

林慶根의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7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柳賢相

심사위원 이은득

심사위원 강응세

목 차

국문초록 ····· i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

제 2 장 중국의 국방정책 개관 ····· 4
제 1 절 중국 국방정책의 형성배경 ····· 4
1. 국가안보 환경 인식 ····· 4
2. 국가이익과 목표 ····· 6
제 2 절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개요 ····· 9
1.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 9
2. 중국군의 현대화 정책 ····· 19

제 3 장 중국의 국방정책과 한반도 안보환경 분석 ····· 33
제 1 절 중국의 한반도 인식 ····· 33
1. 대 남한 인식 ····· 33
2. 대 북한 인식 ····· 34
제 2 절 중국의 대 한반도 국방정책 ····· 36
1. 국방 기본정책 ····· 36
2. 국방정책 변천과정 ····· 38
3. 국방정책 추세 및 전망 ····· 40

제 3 절 중국의 국방정책과 한반도 안보 ····· 44
1. 한국의 안보환경 ····· 44
2.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 ····· 48
3.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분석 ····· 49

제 4 장 중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 58
제 1 절 대응전략의 개념 ····· 58
1. 대응전략의 개념 ····· 58
2. 한국의 안보대응전략 계발 ····· 60
제 2 절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전략 ····· 61
1.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계 확립 ····· 61
2. 다자간 안보체계 구축 ····· 67
3.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 ····· 70
제 3 절 국방정책 분야의 대응전략 ····· 74
1. 국방정책의 발전전략 ····· 74
2. 국방개혁의 추진 ····· 78
3. 대응군사전략 계발 ····· 81

제 5 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3

ABSTRACT ····· 96

표 목 차

<표 2-1>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 8
<표 2-2>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 8
<표 2-3> 연도별 중국군의 주요 현대화 추진 현황 ····· 21
<표 2-4> 세계 5대 핵 보유국의 원자 및 수소폭탄 연구 개발 시기 ····· 22
<표 2-5> 중국군 역대주요 병력 감축 일지 ····· 25
<표 2-6> 2003년 중국 및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 28
<표 2-7> 2003년 중국 국방비 지출 내역 ····· 29
<표 3-1> 동북아지역 각 국의 국력 및 군사력 비교 ····· 51
<표 3-2> 2007년 세계 핵전력 현황 ····· 52
<표 4-1> 미국의 4단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72
<표 4-2> 한·중 주요 인사교류 실적 ····· 75
<표 4-3> 한·중·일의 군사력 비교 ····· 81
<표 4-4>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상전투함 비교 ····· 82
<표 4-5>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투자 기간 및 소요 예산··· 85
<표 4-6> 한국의 국방비 배분 실태 ····· 86
<표 4-7> 분쟁국 및 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87
<표 4-8> 국방정보화 기반 구축계획 ····· 88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군 4대 총부의 조직 ····· 10
<그림 2-2> 중국 인민해방군의 편성 ····· 11
<그림 4-1> 전략체계 ····· 59

국문초록

중국의 국방정책이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A Study on the Chinese National Defence Policy Affected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국제안보전략학과 임경근
지 도 교 수 강용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및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정치이념 보다 현실 국가이익을 중시하게 되면서 국가이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관계가 당연히 중시되기 시작했다. 등소평(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4개 현대화(四個 現代化)」라는 경제건설을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그때부터 경제요인과 대외개방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주변국에 대한 안정유지와 동북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UN과 같은 국제안보기구 및 지역적인 다자안보기구에 참여를 확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증가로 군사력을 첨단전력으로 강화하는 한편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전략을 미국과 주변국 등에 표출하고 있다.

군사전략분야에서는 「인민전쟁이론」에서 첨단기술 조건하의 적극방어로 변경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적을 격파하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산의 확충과 해·공군력의 획기적인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및 주변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 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군사지

원으로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 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한반도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계를 확립해야하고,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자주국방의 능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방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교류를 확대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방개혁을 통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군 구조 개편, 장비 및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 대응군사전략 계발을 통해 유사시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2000년대의 국제안보와 한반도안보 환경 속에서 현존의 위협과 미래의 주변국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여 국가번영과 평화통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대응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반도의 안보외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 시기를 지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또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는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한국의 강력한 우방국이며 최대군사 주둔국인 미국은 점차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안보정세의 흐름은 미국-일본-호주-인도라는 다자협력 안보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시아의 최대 군사 강대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으로 칭함)은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1] 중국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증액하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대 현대화는 작전 능력과 범위를 확대시켜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는 장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중국과는 지정학적으로 반도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인접국으로, 역사적·문화적으로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선진국으로, 그리고 한반도를 서양과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 역할 등으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 국경의 인접국으로서 양국 간 끊임없는 분쟁을 겪어왔다. 약소국인 한반도가 주로 침해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등 일방적인 관계이긴 했으나, 적대적인 한·일 관계와는 달리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인민지원군을 파견한 국가로 북한과는

1) 1976년부터, 특히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의 신시기이다. 1976년 10월 중앙의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한 급진주의 집단인 「4인방(四人幇)」이 타도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은 11기 3중전회(三中全會)를 소집하여 문화대혁명의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기본노선을 제정하였다. 그 기본노선은 바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4개항의 기본 원칙과 개혁·개방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은 고속 발전시기로 진입하였다. 10년이라는 단기간에 국민총생산액이 이전 30년간의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농공업생산 도시건설 교통운수 상업유통 대외무역 경제특구 과학문화 등의 각 방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http://user.chol.com/~oukang/china/dangdeasa22.html,(검색일 : 2008. 1. 1)

혈맹 관계이며 남한은 교전상대국이었던 점에서, 남북한 주민에게 오랫동안 적국과 우방국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한과는 경제적인 파트너, 북한과는 경제적·군사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탈냉전 이후 이전의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양적 군사력의 틀에서 벗어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로인해 탈냉전 이후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그 위상이 막강해지고 있다. 이는 주변국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외교 분야, 국방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미래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안보정책이다.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보가 확보되어야만 국가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탈냉전 이후 급격히 변해가는 중국의 국방정책이 한반도 및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한국의 분야별 대응전략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중국에 관해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발표되었던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와 각종 보고서, 학위 및 연구논문, 단행본 및 간행물, 신문기사와 인터넷 자료 등을 비교분석하여 가능한 최신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서술하고, 필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부에서는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중국 국방정책의 개론으로서, 중국의 국가

안보 환경의 인식과 국가이익 및 목표를 포함한 국방정책의 형성배경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최근 중국 국방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중국군 현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인식과 대 한반도 국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중국의 대 한반도 국방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전략과 국방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기술 및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제 2 장 중국의 국방정책 개관

제 1 절 중국 국방정책의 형성배경

1. 국가안보 환경 인식

중국의 안전보장 전략은 전통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강대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의 역학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나온 중국의 안전보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서 중국의 안전보장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60년대 말부터 자국의 안보에 대해 최대의 위협은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이라고 칭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안전보장 전략은 중·소 국경지대에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하여 국경 지역의 방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후 중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과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일본을 잠재적인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라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나 일본과 무력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현재의 동북아시아 국제체제는 아직 새로운 국제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국제체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이러한 새로운 안전보장 인식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의 국제체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현대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2)]

냉전이 종식된 동북아시아지역의 상황은 미·소 대결이 소멸됨으로 인해 강대국 사이의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감소되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역에 잠재하고 있는 분쟁요인들이 표출되어 국지적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도 이전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이나 티벳

2) 김성욱 ,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산 : 2003), p.70.

문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남사군도와 조어도의 영유권 분쟁, 또한 일본 북방 4개 도서의 영유권 문제,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이 금후 중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영향요인으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난 걸프전의 경험을 통해서 최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에 의한 군사력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절박한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국방현대화 추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 전략의 수립과정에는 두 가지 고려 요소가 중요하다. 즉, 중국의 국내정치 목표와 연관된 주변 지역의 평화·안정의 문제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이 수행해야 할 대외적인 역할의 범주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3)]

첫째, 중국은 현재 「4개 현대화」 정책을 최우선 국가발전 전략으로 정하고 있다. 이의 성취를 위해서는 중국 주변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인접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원한다면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억지력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냉전체제의 붕괴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냉전기의 중국이 미국·소련과 함께 누려왔던 전략적 삼각체제의 한 축으로서의 특전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냉전체제 하에서의 중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소련의 봉쇄에 참가하는 대가로 특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더 이상 그러한 특전이 주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중국의 전략적 관심은 세계로부터 중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태 지역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은 냉전 종식에 따라 미·소 양극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다극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이 금후 세계차원의 「축」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 내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4)]

---

3) 주진원, 「중국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20.

2. 국가이익과 목표

1949년 10월 1일 탄생한 중국의 헌법은 1954년 3월 최초로 공표된 이후 2005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약칭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시까지 수차례의 수정이 거듭되었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주인으로 하는 헌법 1조의 규정[5]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가급 지도계층 대부분이 노동자나 농민이 아님은 물론 이와 관련된 단체와도 무관한 중국 공산당 소속이므로 중국의 정체를 실질적인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권력의 수장이 됨과 이 지도자의 통치이념이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며 국가이익과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형태를 띤다.[6]

중국의 통치이념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강택민의 3개 대표론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식 평균주의의 틀을 깬 등소평 이론과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당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강택민의 「3개 대표론」이 현재 중국의 전략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다.[7]

이와 같이 중국 지도자의 통치이념은 지도자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통치철학과 이념, 사상, 전략 및 정책이 항상 일관되고 분명하다 할 수 있다.

(1) 중국의 국가이익

중국은 국가이익의 범위를 안보이익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중국의 현대화로 상징되는 문화이익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중 경제이익을 당면한 국가이익의 최우선으로 두고 안보이익, 정치이익, 문화이익 순으로 설정하고 있다.[8] 냉전의 종식과 국제안

---

4) 김성욱, 전게논문, p.71.

5) 중국의 헌법(1993년 개정) 제1조는 "노동자(工人)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농민연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獨裁)의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류명현, "중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 석사학위논문, (서울 : 2006), p.5. 재인용

6) 상게논문, p.5.

7) 중국의 통치이념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강택민의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는 것"이라는 중국 헌법 전문을 참조한다. 최경식, "중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미·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2004년 남성대 포럼, 2004), p.1.

8) 송대성 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9.11」 테러사태 이후」, (성남 : 세종연

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결국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안보에서 경제 이익으로 전환했으며 적용범위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9]

안보이익은 전략안보와 국가통일, 그리고 경제안보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전략안보는 첫째, 국가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회피한다. 둘째, 아·태 지구에서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주변지역의 안정을 옹호한다. 셋째, 핵 역량을 보유하되 주변국의 핵 확산에 반대한다. 넷째, 중국특색의 정예군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통일은 국가의 통합 및 안정, 주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며 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안정할 경우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국가통일 이익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현안은 대만의 영구독립 시도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의 국가목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 대표자대회 보고와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회의에 나타난 중국의 국가목표를 요약하면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위해 전면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열어 나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목표는 종합국력 증강, 국권통합 및 주권수호, 강대국 지휘확보로 세분되며, 첫째, 종합국력의 증강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반에 부강, 민주, 문명화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를 구축하고 21세기 말에는 사회주의 기초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2030년까지 「三步走」로 칭하는 3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닌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발도상국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함으로써 중급단계의 지역대국을 건설하고, 21세기 말에는 세계대국이 되어 세계정치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최종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절대조건은 평화와 안정이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적어도 100년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구소, 2003), p.83.

9) 오규열, 「중국 군사론」, (서울 : 도서출판 지영, 2000), pp.119-120.

9월 중국 공산당 제15기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강택민 당 총서기가 말한 중화진흥의 요지이다.[10]

둘째, 국가통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를 통합하고 주권수호로 대만에 대한 통일을 실현하고,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을 영구히 저지하며 1997년 홍콩과 1999년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이후 대만문제의 해결에 진력하면서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국민을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1>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연 도		기 간	목 표
三步走	1단계	현재 - 2010년(GDP:약 2조 위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발도상국
	2단계	2011 - 2020년(GDP:약 4조 위엔)	
	3단계	2021 - 2030년(GDP:약 8조 위엔)	
21세기 중반		2031 - 2049년	중급단계의 지역 대국
21세기 말		2050 - 21세기 말	최종적으로 세계 대국

출처 : 류명현, 「중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 p.7.

셋째,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창설하고, 21세기 초부터 자국에 유리한 新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발전 전략과 결부하여 최종 지역 강대국을 거쳐 세계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11]

<표 2-2>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GDP(억 위엔)	79,553	82,054	89,044	95,993	102,398	900-1,000억 달러
증가율(%)	7.8	7.1	8.0	7.3	8.0	

출처 : 류명현, 「중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 p.8.

10) 상게서, p.121.

11) 중국의 부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새로운 잠재적 강대국의 등장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강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일부에서는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新 냉전체제'로 표현하고 있다. 이정철, "북한의 외무성 성명 이후 후속 정세전망",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23.

제 2 절 중국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개요

1.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1) 국방정책

국가안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었으나, "국방은 군사적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방정책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권위적으로 결정한 행동지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국방정책의 핵심수단이 군사력이므로 국가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보유하며, 사용하는 것에 대해 권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국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중국 국방정책의 정의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국 국방정책은 중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중국 국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무장 세력의 임무는 국방의 공고화, 침략 저지, 국가 수호, 국민의 평화적인 근로 보호, 국가건설사업 참가, 국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의 공고와 침략 및 무력전복 저지, 국가주권과 통일 그리고 영토 보전과 안보를 보장한다. 둘째, 독립자주, 자력갱생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한다. 셋째,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한다. 넷째, 중국 특색의 군 정예 : 중국군은 투철한 사상무장, 내실 있는 훈련, 엄정한 기율, 완벽한 군수지원이라는 총체적 요구에 의거, 중국 특색의 인민군대 육성에 주력한다. 다섯째, 군·민 일체와 전 국민의 자위를 중시한다. 여섯째, 국방건설은 국가 경제건설이라는 대의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이룩한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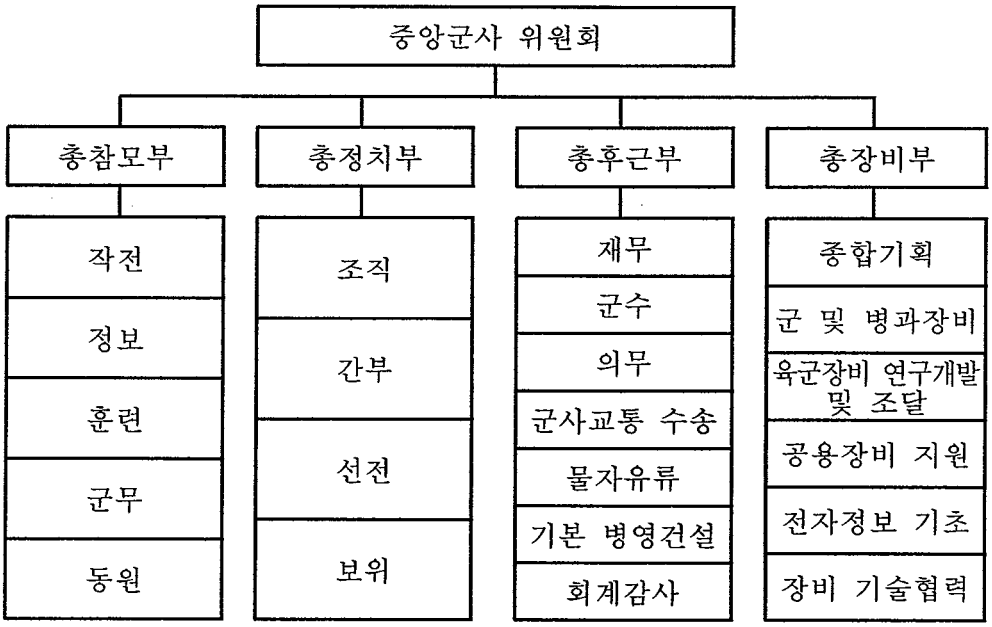
2) 중국의 국방체계

중국의 군사력은 중국 현역부대와 예비역부대, 중국 인민무장경찰,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군사력을 통솔 및 총괄 지휘한다. 국방부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구로서, 국무원내 국방건설 업

12)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제3차 한·중 외교안보대화 참가 결과」, (국방부, 2007), p.4.

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이다. 중국 현역부대는 국가의 상비군으로서 방위작전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필요시 법률규정에 의거 사회질서 유지에도 협조할 수 있다. 이의 조직체계는 기본 조직구조로 4대 총부, 군 및 병과, 군구체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그림 2-1> 중국군 4대 총부의 조직 참조)

<그림 2-1> 중국군 4대 총부의 조직



출처 :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2007), 국방부 내부자료 참조 필자 재작성.

총부는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하에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군사위원회는 위의 4대 총부를 통해 각 군구, 각 군, 병과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한다. 국방부의 실무는 4대 총부가 분담하여 처리한다. 총참모부는 전국 군사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작전, 정보, 훈련, 군무, 동원 등 실무부서를 두고 있다. 총정치부는 전군의 전군 정치사상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전군내의 당무활동을 관장하고, 정치사상 업무의 전개를 책임지며, 조직, 간부, 선전, 보위 등 부서를 두고 있다. 총후근부는 전군의 군수지원업무를 책임지며, 재무, 군수, 의무, 군사 교통 수송, 물자유류, 기본 병영건설, 회계감사 등 부서를 두고 있다. 총장비부는 전군의 무기장비 발전업무를 책임지며, 종합기획, 군 및 병과

장비, 육군 장비의 연구개발 및 조달, 공용장비 지원, 전자정보 기초, 장비 기술협력 등 부서를 두고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육군, 해군, 공군 등 3개 군과 제2포병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병과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은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화학, 육군항공 등 전문병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수상함정부대, 잠수함부대, 항공병, 해안방어, 해병 등 병과와 특수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은 조종,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 포병, 레이다, 공정 등 병과와 특수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2포병은 전략 미사일부대, 전술 미사일부대와 특수부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2> 중국 인민해방군의 편성 참조)

<그림 2-2> 중국 인민해방군의 편성

출처 :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2007), 국방부 내부자료 참조 필자 재작성.

군구는 국가의 행정구역, 지리위치 및 전략 전역방향, 작전임무에 따라 설립된 군사조직으로서 예하에 수개의 육군 집단군, 각 병과부대, 군수지원부대와 성 군구(위수구, 경비구)를 두고 있다. 이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관할지역내 육·해·공군 부대의 합동작전과 연습을 기획 조정하며, 소속 육군부대의 편성, 군사훈련, 행정관리, 정치사상 업무, 군수 및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며, 관할지역에 민병, 병무 동원, 민방공 및 전장 건설 등을 지도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선양, 베이징, 란저우, 지난,

난징, 광저우, 청두 등 7대 군구를 두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과학원, 국방대학교, 국방과학 기술대학교를 두고 있으며, 군사과학원은 전군의 최고 군사과학 연구기관이며, 전군 군사과학연구의 중심이다. 국방대학교와 국방과학 기술대학교는 중앙군사위원회 직할의 교육기관으로, 국방대학교는 주로 고급지휘관, 고급 참모요원 및 고급 교리 연구요원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방과학 기술대학교는 주로 고급과학 및 기술요원과 전문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예비군 부대는 예비역 장병을 기초로 하고 현역장병을 기간으로 규정된 체제와 편제에 의거 구성된 부대이다. 예비군 부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서열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시는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에는 국가에서 발령한 동원령에 따라 현역부대로 전환되어 전쟁에 투입된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가가 부여한 안전보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무원과 중앙 군사위원회의 이중 지휘를 받으며, 국내 치안부대, 광산부대, 삼림부대, 수자원부대, 전력부대, 교통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민병은 국가 군사력을 구성하는 조직으로, 군사기관의 지휘 하에 전투준비와 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 확립에 협조한다. 총참모부에서 전국의 민병업무를 주관하며, 각 군구에서 관할지역내의 민병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소 군구에서 주둔지내 민병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중국의 국방정책의 변화

중국의 국방정책의 변천은 한마디로 두 개의 군사노선, 즉 혁명화·현대화 노선과 현대화·정규화노선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이러한 군사노선은 결국 노선간의 갈등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정책의 변화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을 건설해 왔는가에 따라 다르게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군의 혁명화·현대화노선은 국내 혁명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체계화한 모택동의 군사상을 근거로 하여 인민의 군대 즉, 민병을 모체로 한 대중국군의 건설을 지향하는 군사노선이다. 모택동의 군사정책(노선)은 그의 말

13) 군사노선이란 이른바 어떠한 성격 또는 내용의 군대 혹은 군사력을 건설할 것이냐의 방법 또는 책략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국방정책을 의미한다.

대로 "전쟁의 결정적 요소는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무기보다 인간이 전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을 발휘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공작, 사상공작이 가장 중요시된다. 따라서 정치선행, 사상선행에 의해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정치공작이야말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한 생명선이고 혁명화야말로 중국군대의 기초이며 본질이라는 것이다.[14]

반면 등소평에 의해 대표되는 현대화·정규화노선은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인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모택동의 군사사상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와 장비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군사노선이다. 즉, "현대전쟁은 기술의 싸움이지 정치나 사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또는 "막스·레닌주의로서는 비행기가 뜨지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군사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무기,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정규화된 교육·훈련, 일련의 정규화된 제도가 없으면 사람과 기술을 하나로 결합시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현대화에는 정규화가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본다.

앞의 중국의 국방정책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방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국방의 공고와 침략 및 무력전복 저지, 국가주권과 통일 그리고 영토 보전과 안보를 보장한다. 둘째, 독립자주, 자력갱생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한다. 셋째,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한다. 넷째, 중국 특색의 군 정예 : 중국군은 투철한 사상무장, 내실 있는 훈련, 엄정한 기율, 완벽한 군수지원이라는 총체적 요구에 의거, 중국 특색의 인민군대 육성에 주력한다. 다섯째, 군민일체와 전 국민의 자위를 중시한다. 여섯째, 국방건설은 국가경제건설이라는 대의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국방력 건설은 패권주의의 군사적, 비군사적 침략과 도발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국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실천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국방력 건설이 반 패권주의에 대한 보장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4) 김성욱, 전게논문, p.75.

사실 중국의 국방력 건설은 1978년 이후 「4개 현대화」의 한 구성부분인 국방 현대화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다른 세 개의 현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현대화에 의해 존재하며 보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건설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많고 기초가 취약하며, 자금이 유한하다는 것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발전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방력 건설이 ① 국가건설의 전체적인 목표에 종속되어야 하고, ② 국가건설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③ 국가건설의 전체적 목표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인식하에 1995년 국방력 건설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근본적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민해방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일본적 조건 하의 국지전쟁에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현대적 기술, 특히 첨단기술 하의 국지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의 건설에 있어서 수량 위주의 규모형에서 질 위주의 효능형으로 그리고 인력 밀집형에서 과학기술 밀집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는 선진 과학기술에 의해 선도되는 군사혁신이라고 하였다. 국방백서에 반영된 이 원칙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인민해방군 지도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정치적 노선이기도 하다.[15]

(2) 중국의 군사전략

전략이란 용어는 원래 싸움할 '戰'자와 꾀할 '略'자가 합쳐진 용어로 "싸움을 꾀하다"라는 뜻을 가진 군사력 운용개념을 말한다.[16] 영어에서 'Strategy'용어는 희랍의 'Strategos' 또는 'Strategia'에서 유래된 말로써 장군의 지휘술 혹은 장군의 術로써 군사적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을 "전쟁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투운용에 관한 術이라 하여 전시의 전투중심"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앙드레 보프르는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힘의 적용술"이라하여 클라우제비츠의 정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의 개념이 순수한 무력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과학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정책의 전반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콜린스(John M. Collins)는 전략을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15) 주진원, 전게논문, pp.29-39.
16) 조영갑, "한국 군사전략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전략적 특징의 정립",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서울 : 국제안보전략문제 연구소, 2007), p.67.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힘을 결합시키는 기술"이라고 보고 전략체계는 국내외의 제반문제를 총괄하는 정치·외교전략, 경제전략, 사회·심리전략, 과학기술전략, 군사전략이 있으며, 이것들을 종합하여 국가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이란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운용에 관한기술"이라 했고, 마한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군대를 건설·유지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했다. 미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전략을 "무력이나 무력의 위협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정책(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술이며 과학"이라고 정의하였고, 일본은 "전쟁의 발생을 억제,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일단 전쟁이 개시될 경우에 그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과 기타 제역량을 준비, 계획, 운용하는 방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운용하는 방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7] 즉,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키는 하나의 가교로서 군사력을 준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실제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방책을 지칭한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으나, 기본적으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영토의 보전과 영토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서방과 일본에 의해 영토를 침입 받아 왔으며, 또한 현재 중국의 영토는 대만과 본토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가 1949년 이래 중국의 군사전략을 지배하고 있다.[18]

1) 적극방어 전략

중국의 새로운 안전보장 인식은 대규모 전쟁이나 핵전쟁에 기초했던 과거의 군사전략을 변화시켰다. 중국이 새로이 채택한 군사전략은 「현대화 상황 하의 인민전쟁」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면적 안전보장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자국의 최강 전쟁요소인 인

17) 정책과 전략의 의미적 차이는 정책이 본질적으로 행위와 결정의 형태인 반면에 전략은 행위나 결정을 포함하는 제 수단이 목표의 완수를 위해 지향해야하는 기획의 특성을 갖는다.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2002), pp.80-82.

18) 김정익, "중국 군사력 평가", 「주간국방논단 제845호」, (서울 : 국방부, 2001), p.2.

구와 국토의 효용을 극대화한 「인민전쟁전략」을 유지하였다.[19] 이 전략은 모택동이 항일전·국공내전 등의 경험을 통하여 도출한 전략이론으로서 그 본질은 "자신을 보존하고 적을 섬멸하는 것"을 궁극의 군사목표로 하고, "적은 강하고 자신은 열세"라는 입장에 입각한 군사전략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사상의 기본은 현재에도 여전히 계승되고는 있지만, 1980년대 초부터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국군 내에서는 인민전쟁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이 전략은 전면전에 대비한 인구 및 국가 경쟁력의 총동원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 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입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당시 중국의 주적(主敵)인 소련은 화력과 기동력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제한전·속결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중국의 인민전쟁전략으로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사실상 중국은 독자적으로 구소련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전략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강대국들과 연합하여 구소련에 대항하였다. 한편으로는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통해 인민들의 동원을 극대화한 인민전쟁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셋째, 중국 국경지대의 산업시설과 연해도시가 국가전략에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전쟁의 추진으로 인한 영토 및 경제적 손실을 허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중국 당·군 지도자들의 인식변화는 1980년대 초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당시 인민해방군의 군사과학원 원장이었던 송시륜(宋時輪)장군은, "적을 깊숙이 유인하는 전략은 중국의 경제적인 이해와 방어 상황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인민전쟁전략을 적극방어전략으로 대치하는 것을 중앙군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몇 개월 후에 중앙군사위원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방어라는 새로운 전략이 형성되었다.[20] 이것은 1980년대 전반 중국군 전략의 첫 번째 변화였으며, 이 적극적 방어 전략은 소련과 전면전에 대처하는데 목적을 두고 합동군사작전과 전진방어배치를 구상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전반 인민해방군은 적극적 방어전략을 테스트하기 위

19) 김태호, "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 「전략논총 제9호」, (서울 : 국방부, 1998), p.174.
20) 김성욱, 전게논문, pp.77-78.

해 중국 북부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전쟁게임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또한 조직화된 육군병력을 더 신속하고 중무장하기 위해서 탱크, 장갑차, 자주포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 제한전쟁 전략

군사전략의 두 번째 변화는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등소평은 1985년 5월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중국의 방어적 위치를 재평가하면서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당·군 지도자들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조기전, 전면전, 핵전을 대비한 전력태세에서 국경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에 대비한 제한전쟁으로 전략적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후 중국은 현재까지 화력, 기동력 및 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 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다.[21]

국지전이란 현재로서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저강도 전쟁과 제한 전쟁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주변부 특히 국경부근과 섬이나 대륙붕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리·시간적으로 제한된 분쟁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22]

국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군사행동이 요구되며, 또한 최첨단 무기의 존재 여부가 이 경우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국지전은 전면전쟁과는 달리 기습전 범위의 군사작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의 확보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 군사력의 국지전에 대한 대응능력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 현대화 작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군은 1985년 신 군사전략의 채택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전략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력구조 및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인해, 단기간 내에 중국군 전력을 전반적으로 재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군은 신 군사전략 추진 초기에는 병력감축, 조직정비, 훈련강

21) 김태호, 전게논문, p.175.
22) 주진원, 전게논문, p.24.

화와 같은 저비용·점진적 방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전력요소에 대처하게 되었다. 전력 정비의 일환으로 인민해방군은 1985년에서 1987년 기간 중 1백만 명을 감군 하였고, 기존의 군구(지역별로 편제된 대군구)를 11개에서 7개로 재조정하였으며, 36개의 야전군을 24개의 집단군으로 전환하였다. 이 집단군은 서방의 군단에 해당하는 전투부대단위로서 제한적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개편되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위와 같은 제한적 국지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군구에 쾌속반응부대를 창설, 운용하고 있다. 이 부대는 국지전의 전략개념에 맞도록 편성되어 국지적 억제와 방어 및 긴급대응 그리고 신속전개를 위한 소수의 고도로 훈련된 기동성 있는 부대로서 각종 첨단장비와 재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인민해방군은 신 군사전략의 채택 이후 최초로 1988년에 4차례에 걸쳐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이 전략의 실용성을 타진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초 이후에는 현대식 무기체계 및 장비의 도입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고,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합·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신 군사전략의 세 번째 변화는 걸프전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초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은 예측하기를, 중국 주변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이테크 전쟁을 지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차 10-20년 내에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제한전은 하이테크 고강도 전쟁이 아닌, 주로 낮은 혹은 중간 수준의 강도를 지닌 재래전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걸프전은 중국군 수뇌부의 이러한 생각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중국은 많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1980년대 말 이래로 대규모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결과적으로 인민해방군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제한전들이 더 이상 낮은 강도의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하이테크 고강도 전쟁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초에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군사전략을 다시 수정하였고, 신전략은 하이테크 제한전과 국지적인 갈등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걸프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각종 첨단무기의 위력과 이를 이용한 매우 복잡한 작전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은 현대전의 개념 및 많은 국가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걸프전 이후 중국의 군 최고지도자들도 미래전의 성패는 첨단군사기술의 획득·운용에 있다고 판단하여 1993년 이후 첨단군사장비가 운용되는 제한전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기술의 국지전쟁" 전

략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중국군 수뇌부는 첨단기술 하의 제한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감도의 효율적인 통신, 지휘, 통제, 컴퓨터 및 정보(C4I)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미래 첨단전쟁에서는 적이 중심부에 대한 신속하고 입체적인 돌발적 기습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이 어느 방향과 어느 고도로 기습해 올지의 정보를 빨리 획득해야 하며 조기경보를 통해 사전에 전쟁에 대비해야 할 시간을 얻기 위해 반드시 원거리와 전방위 및 다차원적인 공간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체계(정찰위성, 레이더)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23]

이에 따라 중국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를 이 전략의 추진에 필요한 전법 훈련기간으로 설정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1996년 초 발표한 「新군사훈련대강」에 동 훈련의 결과를 포함시킨 바 있다.[24]

2. 중국군의 현대화 정책

(1) 현대화 추진 배경

중국은 국민당과의 내전, 한국전쟁, 소련과의 무장충돌, 베트남전 등의 직접적인 영향과 걸프전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1950년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助)라는 명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국군은 비록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전쟁에서 승리한 듯 하였으나, 미국과 UN군의 신식무기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또한 1969년 3월 중국의 동북쪽 국경선지역인 「쩐빠오따오」라는 지역에서의 소련과의 무장충돌에서 신식무기를 겸비한 소련군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련에게 손쉽게 승리를 내 주어야만 했다.

1979년 2월 17일 중국은 50만의 지상군으로 베트남을 공격하여 3월 5일 베트남 랑선(Lang son)을 점령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랑선 점령 후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을 징벌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선포하고 즉시 철군하였다. 그러나 철군을 하게 된 이유는 한 달이 채 안되게 치

---

23) 황병무,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서울 : 국제문제 318호, 1997), pp.49-60.
24) 김성욱, 전게논문, p.81.

른 전쟁에서 중국군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90년대 발생한 걸프전과 미국의 이라크 및 유고 공습이다. 걸프전에서 1991년 8월 쿠웨이트를 무단 점령한 이라크를 다국적군은 첨단 과학무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이라크는 중국의 군수품 수출의 최대고객이었으므로 중국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도 높았다. 전쟁이 끝난 후 해방군보(解放軍報)는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전에서 종합 전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군의 질이며, 비록 병력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질이 제고된다면 전투력은 상대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25]라고 분석했다.

걸프전쟁 후 해방군은 과학기술의 발전, 군비의 개량, 훈련과 정비 그리고 작전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유화청(劉華淸)은 1991년 6월 북경에서 개최된 국방과학 공업위원회 대표회의에서 해방군 육성의 중점은 현대화에 두어야 하고, 군의 현대화 작전 능력과 과학 기술 수준을 재고시키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하였다.[26]

이처럼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부터 1990년대 걸프전까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요소는 장비의 현대화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군의 현대화만이 21세기 세계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2)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 과정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한국전쟁부터 1958년, 2단계는 1959년부터 모택동이 사망한 1976년까지, 3단계는 등소평이 집권한 1977년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1) 1단계(1950~1958)

1949년 혁명에 성공한 중국은 건국과 동시에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미군과 UN군의 현대화된 무기에 중국 재래식 무기의 현격한

25) 박건구, "중국군의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국방대 석사학위논문, (서울 : 2005), p.14.
26) 상게논문, p.15.

약세를 체험하고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수입하고, 국내적으로는 현대화된 무기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은 소련을 모방하여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군수공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20여개의 대형 군수공장을 설립하여 장갑차와 각종 화포 및 탄약을 생산하였다.[27] 이 시기는 중국의 현대화 무기 개발 및 군수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 2단계(1959~1976)

1958년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1959년 6월 소련은 중국과 체결한 모든 국방관련 협정을 파기하고, 마침내 1960년 8월에는 중국내 파견된 소련 과학기술자를 모두 철수시켰으며, 일체의 원조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군 현대화를 자력으로 추진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표 2-3> 연도별 중국군의 주요 현대화 추진 현황

구 분	주요 현대화 추진 현황
1962년	중국제 미그-19 제작 성공
1964년	핵보유, 중국제 미그-19기 양산체제 돌입
1967년	수소 폭탄 개발
1970년	중장거리 전략 미사일 개발 진력

출처 : 류명현, 2006, 내용에서 필자 재작성.

1960년 들어 중·소간의 이념대립이 격화되어 소련은 더 이상 중국의 우방이 아닌 존재로 변하였으며, 중국은 자력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1960년대 초 중국은 핵무기와 항공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두었으며, 1964년에는 수차례에 걸친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1962년에는 소련제 「미그-19, 20」 기를 모델로 한 중국제 「미그-19」 기 제작에 성공하여 1964년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하였다. 1966년부터 1976년은 문화혁명기로 군내 권

27) 상게논문, p.16.

력투쟁이 심화되어 군의 현대화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시기이다.

또 이 시기는 미국이 월남전에 깊숙이 개입하여 중국에 대한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군의 현대화의 절박함이 약화되는 계기가 가중되어 군의 현대화 추진은 더욱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와 수소탄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66년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1967년 수소폭탄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핵전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미사일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거두었다. 1966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로켓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1970년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였다.

<표 2-4> 세계 5대 핵 보유국의 원자 및 수소폭탄 연구 개발 시기

구 분	원자탄 개발 시기	수소탄 개발 시기	상호 간격
미 국	1945년 7월 16일	1952년 11월 1일	7년 3개월
소 련	1949년 8월 29일	1953년 8월 12일	4년
영 국	1952년 10월 2일	1957년 5월 15일	4년 7개월
프 랑 스	1960년 2월 13일	1968년 8월 24일	8년 6개월
중 국	1964년 10월 16일	1967년 6월 17일	2년 8개월

출처 : 오규열, 「중국 군사론」, (서울 : 지영사, 2000), p.32.

3) 3단계(1977~현재)

1976년 모택동 사망한 후 집권하게 된 등소평은 1977년 공산당 제10기 3중 전당대회에서 당 내외 일체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장악한 등소평은 중국의 국방전략을 「인민전쟁론」[28]에서 미래전에 부합된 "현대화된 조건하의 인민전쟁론"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등소평의 중국군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국무원 총리인 주은례(周恩來)가 주장한 국방현대화를 포함한 중국의 4개 현대화 과제는 1964년 12월에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나 문화대혁명[29]으

28) 「인민전쟁」이란 모택동(毛澤東)이 1945년 4월 주창한 군사이론으로 전쟁수행에 있어 인적요소를 중시해 "열세한 장비를 가진 군대가 우세한 장비를 갖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구현한 전략"이다. 인민전쟁은 유격전, 섬멸전, 지국전에 체계로 이루어 졌으며, 중국군은 특히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대항해 인민전쟁을 적용,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http://www.militaryreview.com/?inc=news, (검색일 : 2008. 1. 1)

로 무산되고 말았다. 주은래는 1973년 8월에 "금세기내에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기필코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1975년 1월 제4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주은래는 4개 현대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후 4개 현대화는 중국의 국정 목표가 되었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던 등소평은 국방현대화의 임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국방현대화의 결의문은 문화혁명 4인방의 강력한 반대로 배척당하고 말았다.

그 이후 국방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등소평이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고 난 후인 1980년부터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경제성을 고려한 공업구조 개선과 기술개발로 새롭고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서방 선진국과의 군사 과학기술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신형 장비의 구매와 기술도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를 증설하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1982년 중국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거랑(巨浪)-1호」의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의 미사일 발사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30] 이로써 중국은 지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핵 타격역량을 구비하여 그 전략적 지위는 한층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서방세계와의 활발한 군사교류를 통해 단순히 소련의 전투기를 모방하는 단계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군은 1976년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구축함과 순양함 및 각종 함포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1983년에 이르러서는 속도나 크기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잠

---

29) 「대약진 운동」의 실패 후 유소기와 등소평(登小平)은 국민경제의회복을 위한 경제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권력의 불안을 느낀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격렬한 반우파(反右派)투쟁을 일으켰다. 그는 숨어있는 부르주아의 대표적 인물과 당내의 자본주의적 실권파를 공격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 선봉대를 혁명적인 청소년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년 노동자, 대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소학교 학생까지 가담한 「홍위병(紅衛兵)」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무수히 만들어지면서 모택동의 외침에 일제히 거리를 휩쓸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이러한 광기를 동원하여 유소기, 등소평 등을 실각시키는 한편, 사회전체를 경직된 사회주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문화대혁명의 열광적인 반우파 투쟁은 소위 「4인방」이라 불리는 왕홍문, 장춘교, 요원문, 강청 등 4명에 의해 지속되다가 모택동이 죽자 급속히 무너지고 말았다.
(http://user.chol.com/~oukang/china/dangdeasa22.html, 검색일 : 2008. 1. 1)

30) 오규열, 전게서, p.36.

수함과 쾌속선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육군은 생화학 무기와 자동제어 시스템, 그리고 대공무기 및 통신 분야에서 비약한 발전을 하였다.

군사상의 전략적 전환은 등소평이 1985년 6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등소평은 전쟁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당면한 국제정세는 평화와 발전이 주를 이루어 당분간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개발에 군의 직접적 참여를 요구함과 동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무기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강화를 강조하였다.[31]

등소평에 의해 군사사상의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중국군은 경제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육·해·공군은 물론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까지 필요로 하는 경제건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에 순수하게 군용품만을 생산하던 군수산업은 군민 결합체로 전환하였고, 무기개발도 대규모 생산방식에서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하여 주요부대에 우선 공급하는 경제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이 수습되자 등소평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포함한 일체의 공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강택민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계승함으로써 그는 명실상부한 당·정·군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군 경험이 전무(全無)한 강택민은 주석직에 취임한 후 군 고위 인사들의 군 고유 업무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는 등소평의 군사전략을 계승 발전시켜 「두 가지 근본적 전략 전환」[32]을 제시하였고 첨단하이테크 전쟁에 대비한 중국군의 육성에 진력하였다.

(3)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 현황

중국은 불안정한 중앙아시아의 정세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대만문제 및 잠재적인 경쟁자인 미국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

31) 오규열, 전게서, p.37.

32) 첫째, 과거 재래식 전투준비태세에서 첨단 하이테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로 전환, 둘째, 과거 대규모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장비 위주의 구조로 전환함. 유방우, "중국의 국방 현대화가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 석사학위논문, (서울 : 2003), p.28. 재인용

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현대화된 군사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군 현대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은 현대전에 부합되도록 군 조직을 개편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전쟁의 승패가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숫자보다는 첨단무기와 병력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반면,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현대화 추진을 병력감축, 군 구조 개혁, 국방비 증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3]

1) 병력감축

중국은 대륙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변경방어 문제를 중시하여 오면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는 육군을 중심으로 병력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보다는 군 병력의 수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판단 하에 한국전쟁에서도 적용한바와 같이 일명 인해전술을 채택해 왔다.

<표 2-5> 중국군 역대주요 병력 감축 일지

시 기	내 용
1950. 6	◦ 55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감축
1951. 11 ~ 52. 1	◦ 총병력 300만 명으로 조정
1954	◦ 47만 2000명 감축
1957	◦ 총 병력 240만 명으로 조정
1976	◦ 전년도 병력의 13.6% 감축
1985 ~ 86	◦ 100만 명 감축
1997. 9 ~ 99	◦ 50만 명 감축

출처 : 유방우,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03, p.29.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인민해방군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군의 정예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

33) 상게논문, p.28.

서 중국은 현대적 조건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을 정예화 할 필요성에 따라 1985년 6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향후 2년간 100만 명 병력감축을 결정하여 1987년 병력 총수를 310만 명으로 축소[34]하였고,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년 내 50만의 인민해방군을 감축하겠다고 결의하였다. 2000년 2월 중국 정부는 이를 완성하였다고 공식 확인하였다.[35]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러한 감군으로 총 250만 명 내외로 축소되었으며, 군별 감축비율은 육군 18.6%, 해군 11.4%, 공군 12.6%, 제2포병 2.9% 이다.[36] 또한 중국은 2005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총 250만 병력을 23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병력감축 주 대상은 육군이며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육군의 총 병력의 20% 감축을 추진한 후 160만 명 병력의 10%를 추가적으로 감축하여 2005년 말까지 140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공군 1군(군단급)등 5개 군과 해군은 북·동·남해 함대소속 9개 기지에 대해 일부 감축을 실시하고 군수분야의 많은 부분이 감축되며 비 전투기능을 민간부분으로 전환하여 정규 보병은 되도록 유지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총 병력 250만 중 20만의 실제 인원 감축은 대부분 육군인원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1927년 인민해방군 전신인 홍군(紅軍) 창설 이래 모두 9번의 병력감축을 실시했고, 감축 내용은 <표 2-5>과 같다.

감축의 주목적은 비용절감을 통해 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이며 병력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부대구조 개선 및 합리화,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이 병력감축 및 감축예정으로 인해전술로 대변되던 인민해방군의 전략이 정예화를 통한 정예군의 길로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군 구조 개혁

군의 편제는 인간과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조직형식으로 군의 현대화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그러므로 장병의 자질 향상과 무기와 장비의 개선 못지않게, 이를 유기적으로 배합하는 편제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과 무기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시스템은 작전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작전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34) 하영애, 「중국 현대화와 국방정책」, (서울 : 범한서적 주식회사, 1993), p.132.
35) 「한국일보」, 2000년 2월 18일.
36) 국방정보본부, 「2000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0), p.27.

위하여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개선이다. 병력 정예화 및 기구조정을 통해 부지휘관 및 참모를 축소하고 일부장교의 보직을 부사관에게 인계하거나 외부에서 군무원을 채용하는 등 장교들의 수를 대폭 줄임으로서 전군의 장교 비율을 줄이고, 부사관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지휘체계 개선이다. 혼합 편성된 21개의 집단군 중 3개의 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북경(24, 63 집단군), 심양(23집단군) 군구에서 이루어 진다. 군단급 이상 부대 및 직할부대를 중점적으로 기구를 조정하여 중점적으로 기구를 조정하여 평균 15% 감축하였으며, 지휘절차를 간소화하며 작전지휘체계를 개선함으로서 지휘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군별·병과별 구조개선이다. 장비기술이 낙후된 육군 일반부대를 대폭 감축하고 해군·공군·제2포병을 강화하는 것으로 군 병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군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체제 및 편제를 조정하여 단기자원을 위한 임시적 교육과 장기자원을 위한 군사고등 학력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교육체계 마련 등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육기관들은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군수지원체계 개혁이다. 대군구를 기초로 연합군수 지원체제를 계속 시행하고 연합군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군수지원기구와 인원수를 줄이되 정예화하여 삼군이 일체화된 연합군수 지원 체계를 실현하여 종합적인 군수 지원효율을 높인다.

다섯째, 각종 군사학교의 통·폐합이다. 임무위주 교육을 주체로 하되 고등군사교육과 임무수행 능력 교육을 분리시킨 새로운 형태의 군사학교 체계를 수립하고 완성시키며, 일부 군사학교는 군민이 공동으로 수학하거나, 다수인 동일 성격의 군사학교는 한 곳에 집중시키거나 임무가 유사한 학교별로 통합시킨다.

여섯째, 예비전력의 정예화이다. 54개의 보병, 포병, 대공방어 사·여단 예비전력들이 정규군과의 합동훈련을 증가하는 등 인민해방군은 예비전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3) 국방비 증액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방예산의 규모는 한 국가의 전투준비태세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꾸준한 국방예산의 증가는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 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중국의 국방비에 대한 관리·규범화·효율적 사용 등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새로운 국방예산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및 종합 예산제도를 추진하였다. 예산에 대한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비의 투자방향과 투자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방물자 및 프로젝트의 조달제도를 완비하여 자금의 통합 지불범위가 확대되었다.[37]

중국 국방비의 규모는 서방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GDP 및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2-6>에서와 같이 2003년 중국 국방비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5.69%, 일본의 56.78%, 영국의 37.07%, 프랑스의 75.94%에 머무르고 있으나, 국가 경제발전과 재정수입 증가 기초 위에서 국방비를 적절하게 증가시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2005년 국방비는 29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5년 재정지출 1조 9,662억 위안의 14.86%에 해당한다고 하나 중국의 공식적 발표 국방예산은 무기구매, 군사연구 및 개발비와 인건비 등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6> 2003년 중국 및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국 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GDP 대비	3.60	2.64	3.11	2.22	0.99	1.63
정부예산 대비	16.02	14.69	8.10	11.00	6.06	7.74

출처 : 류명현, 「중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 p.22.

중국의 국방예산 편성은 서방국가의 국방예산 편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군은 모든 부대가 농경지와 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본 농경지와 축사에서 생산되는 부식품으로 부대 전체 부식의 30~60% 정도를 충당하

37) 류명현, 전게논문, p.21.

고 있어 서방국가의 국방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식비의 상당부분이 국방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98년부터 군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무기구매 및 조달부서나 정보기관이 경영하는 기업 등 일부는 아직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수입도 국방비로 편성은 되어있지 않으나 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각 군별 및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 개발비 및 무기도입 등은 국방예산이 아닌 다른 국가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구별 일부 예산은 지방예산에 포함하여서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예산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2-7> 2003년 중국 국방비 지출 내역

구 분	총 액	활동 유지비	장비비	인건비
금 액 (억 위엔)	1,907.87	641.04 (33.6%)	646.77 (33.9%)	620.06 (32.5%)

출처 : 류명현, 「중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 p.23.

(4) 중국군의 현대화 목표 및 추세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새로운 군 지도부의 등장으로 인한 가장 큰 중장기적인 변화는 군 현대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국군 영도기구의 장을 포함한 16기 당 중앙위원회 군 인사 총 68명은 기본적으로 고기술·제한전 전략 세대로서 중국의 군사력 제고, 첨단기술 획득 및 대외 군사관계의 확대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16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정치 지도부의 외교·군사경력 부재는 중국의 안보정책, 특히 군사고유 업무에 대한 군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키게 될 전망이다.[38]

중국의 군 현대화 추진에는 수많은 국내·외적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38) 이기종외, '한국안보에 있어서의 중국 : 중장기적 전망', 「전략연구 통권 제29호」, (서울 : 전략문제연구소, 2003), p.113.

특히 중요한 요인은 당과 군의 관계이다. 1990년대 중국군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국 무기체계의 획득 및 군 현대화의 추진은 이와 같은 당·군 관계의 변화가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새로 구성된 당·군 지도부는 이와 같은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군 지도부의 배경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10~15년간 중국군은 유한 국부전쟁을 중심으로 한 군 현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선별적으로 군사분야 혁명에 관련된 기술 및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 핵전략과 재래식 전력 사이에서 중국군 현대화의 중점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며 정치적 효과를 포함하여 투자효율이 높은 핵전력 증강에 두었다. 향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경제건설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막대해진 경제력은 군사력의 강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 현대화된 중국의 군사력은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럴 경우 중국의 군사력은 해양과 우주로 지향하여 확대되어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해양에서 중국의 영향은 서해에서 한국과의 문제제기 가능성뿐만 아니라 남지나해 등에서의 영해문제와 해양자원의 개발을 둘러싸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등, 이후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로의 확대에 있어서는 미국, 러시아 등과의 개발경쟁으로 세계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아시아 제일의 핵전력을 보유한 중국의 핵 확산이 염려되는 가운데 핵 확산방지와 핵 군축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현재 국방정책에서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39]에 따르면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대만해협에서 제3자 개입배제, 장기적으로는 서태평양까지 전력 투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지상군은 140만 명 중 40만 명을 대만과 근접한 3개 군구에 집중 배치하고, 북경과 심양군구에 제3세대 탱크인 ZTZ-99를 2006년 4월에 최초 배치하였다.

해군은 주력함정을 72척, 공격형 잠수함을 58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39) 미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 (미국방부 내부 보고서, 2007. 5. 25)

러시아제 SOVREMENNYY Ⅱ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2006년 말에 2척 도입하였다. 또 094형 JIN급 전략 핵잠수함과 SHANG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개량형을 현재 건조 중에 있으며, 러시아제 KILO급 잠수함 을 2척 구매하였으며, 2002년에 구매 계약을 한 8대는 도입을 완료하여 현재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LUZHOU급 구축함인 LUYANG Ⅰ과 LUYANG Ⅱ는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공군은 700여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공군 주력 전투기로 활용할 J-10 제4세대 다기능 전투기를 배치하고, Su-30MKK / FLANKER(F-11A) 전투기 겸 전폭기 및 해군용 Su-30MK2의 확대 보유, 자체 생산한 Z-10 공격용 헬기는 테스트 단계에 진입된 상태이다.

탄도 및 순항미사일 분야에서는 대만해협 대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900기를 배치하였으며, 미국 본토까지 사격이 가능한 DF-31A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금년 말 실천 배치할 계획에 있다. 또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 JL-2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0년에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방공분야에서는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하는 러시아제 300PMU-2 지대공 미사일 대대를 몇 년 내 창설할 계획이며,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사정거리 150km인 HQ-9 방공미사일 체계를 자체 개발 중에 있다.

우주 및 항공분야에서는 반 접근 전략 및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0년 유인 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은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중국은 이를 근거 없는 경쟁심의 발로하고 일축하는 등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40]

향후 중국의 군사력 건설은 경제력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

40) 게리 러프헤드(Gerry Ruffhed)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지난 2007년 12월 13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건조 능력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의 던컨 헌터(Dunken Hunter) 의원도 청문회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선박은 연간 5천 척이지만 미국은 3백 척에 불과하며, 잠수함도 중국은 매년 3척을 만들지만 미국은 1척밖에 못 만든다"고 우려했다. 헌터 의원은 또 "중국의 연간 철강 생산 능력은 모두 4억 8천만 톤으로 미국의 5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국이 상업용 선박 건조 능력을 군용으로 전환한다면 해군 능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건조 능력이 한국에 이어 세계 2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값싼 노동력 때문이라며 러프헤드 사령관 등의 발언은 중국의 능력을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중국의 전자장비나 미사일 제작 능력은 미국에 크게 뒤지며, 중국산 철강은 군함 건조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군사용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은 상업용 선박 건조 기술과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러프헤드 사령관의 의회 발언이 내년 의회로부터 해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다고 중국 신문들이 전했다.(국방일보, 2007. 12. 17)

초강대국의 전면적 능력과 전 세계적 위상을 추구하지 않으나,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지정학적·수적 우위를 기초로 한 국지적·전술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및 아시아의 전략 환경 분석 전문가인 폴락(Jonathan D. Pollack) 박사는 중국이 2015년경 중국의 인근 해역에서의 해상 거부 능력, 중국 국경지역 주변에서의 공중 우위 지속능력, 다양한 장거리 타격력을 통한 미국의 역내 작전거점 위협능력, 미국의 정보 우위에 대한 도전 능력,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적 핵 위협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41]

41) 류명현, 전게논문, p.28. 재인용

제 3 장 중국의 국방정책과 한반도 안보환경 분석

제 1 절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

1970년대 말 등소평(鄧小平) 체제가 출범하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은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42]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안정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아시아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참여는 한국을 포함한 비공산 인접 국가들과의 비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와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전폭적인 경제적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43]

더욱이 중국에 있어 현대화의 성공은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안정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현대화에 최고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현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이 지역의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44]

1. 대 남한 인식

중국은 남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으로는

---

42) Tao Bingwei, "Observations on the Korean Situation," *Beijing Review*, no. 38, (September 23, 1985), p.16.

43) Jonathan D. Pollack, "Chinese Policy toward Korea : A Continuing Dilemma?", *Asia Pacific Defense Forum, Special-Supplement*, Summer 1984, p.14.

44) 송영우 편저, 「한중관계론」, (서울 : 지영사, 2002), p.13.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방향으로 대 남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중국과 남한은 정치적으로는 다소 미진한 상태로 외교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협력자 관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사상의 차이 및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 남한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중국의 대외 개혁·개방, 시장경제 지향의 기본정책이 유지되는 한, 양국관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문제는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를 미루어 과연 언제까지 호혜의 측면이 지속될 수 있을지,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중국 경제 편중 내지는 종속 가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선린관계에 있어서도 1980도 이후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일반적인 국가관계 이상의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이 중국과 남한의 정치적 외교관계 발전에는 걸림돌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향후 남·북한의 다양한 정치변화와 통일한국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남한의 정치적 외교정책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한·중간의 정치적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및 6자회담과 같은 다자안보협력 등의 전 분야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와 평화정착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한 외교 및 국방정책도 한국안보에 큰 영향요소가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 대 북한 인식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정치·사상적으로 상당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전쟁 당시 인민지원군 파병 등으로 혈맹관계를 통해 일명 '형제의 나라'로 인식되어져 왔다. 또 군사적인 지원차원에서 군사기술 지원 및 장비·무기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북한과 중국의 대립관계를 보여준 한 예로 2001년 북한이 고구려 벽화를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한 사실에 반발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은 집안·환인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고구려 수도 및 국왕·귀족 묘란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신청을 하여 북한과 동시에 2004년 6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바 있다. 이 실례만 보더라도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예전의 혈맹관계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대미·일관계의 발전에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국가적인 고립의 상황에 처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이 90년대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바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국익상의 대립·갈등과 조화가 그대로 투영되는 다양한 수면위로의 표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미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그들의 특수지위를 위협하는 수준이나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은 곧 동북아와 한반도에 있어서 그들의 전략적 지위를 수세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45]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지속 또는 예전의 특수지위 회복을 위해 고위급 교류의 활성화 및 각종 원조, 정치적 영향력 행사할 것이며,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그들의 발전모델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를 회복 또는 상승시키려는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대북 식량 및 에너지 무상원조를 계속하고 있고, 국경무역에도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국경 탈출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46]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지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지리적 요인과 역사적 특수성, 국제현실 등이 있다. 지리적인 측면은 육지와 바다를 연하여 인접한 상태이므로 한반도의 불확실한 상황은 중국의 직접적인 안

45)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서울 : 외교안보 연구원, 2003), p.26.
46) 경창헌,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외교 제69호」(서울 : 외교안보 연구원, 2004), p.53.

보위협과 결부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측면으로 한반도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중국에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국제적 현실을 볼 때 미국의 세계전략이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세계대국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전략적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중국의 대 한반도 국방정책

1. 국방 기본정책

중국의 대 한반도 기본정책도 국가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국가이익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게 정치와 안전이익·경제이익·문화이익으로 이익범주를 논할 수가 있을 것이다.[47] 이 중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와 안전이익의 측면을 살펴보면, 군사적 안전·국가통합문제·영토문제·인권문제와 국제평화체제 수립 등을 논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두 개의 정권을 상대로 한국-중국-북한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남북한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 한반도 기본정책에서 자신의 국가통치이념과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 바로 한반도의 남북한의 두 개의 정권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 혹은 남북한에 대한 「쌍호정책(雙好政策)」이다. [48]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기본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9]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목표가 전면적인 복지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이를

47) 이규태, 「현대 한중 관계론」, (서울 : 범한서적, 2007), p.256.
48) 상게서, p.258.
49) 류명현, 전게논문, pp.30-31.

위해서는 평화와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일치한다. 즉 중국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50]

둘째,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朝鮮', 남한을 '韓國'이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호칭을 통하여 한반도의 두 개의 정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통일이 대세일 때에는 외세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민족 자체의 역량으로 달성된 중립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현안문제에 있어 해결방식은 남북 쌍방 간의 자주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51]이나 한반도 문제에 외세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우호관계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북한과 정치, 안보 면에서의 명분을 구축하고, 한국과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북한이 동북아 각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보다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특수한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핵문제는 중국이 의도한 명분과 실시를 모두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부분 수정이 예상되며 전략의 조정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50) 실례로 1990년대 발생한 1차 북 핵 위기, 북한의 잠수함 남한침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서해교전 등에서 북한의 행위가 불안정했으나 중국은 이를 공론화하는데 반대했다. 이는 공론화가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김태호, "중·러의 반응과 향후전망",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제19회 학술회의」, (2005. 3. 24), p.4.

51) 부산 APEC 도중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호금도 주석은 "남북한 양측의 지속적인 화해와 협력의 추구와 자주적 통일을 바란다."라고 발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외세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아일보」, 2005. 11. 17.

2. 국방정책 변천과정

중국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안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구축과 경제의 재건, 밖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52] 이와 관련하여 모택동은 대외관계에 있어 중간지대론과 3세계론을 통하여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은 항상 '적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제3세계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간의 관계는 정치·군사적으로 경직된 정책을 가져온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는 조공체제(朝貢體制)의 종번관계(宗藩關係)를 수용함으로써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이었고, 19세기 말 이후로는 중국 국가안전의 완충지대로써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을 시행해왔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인식으로 북한의 존립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53]을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큰 관심과 영향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있어 한반도는 동북지방(만주)의 농공지대와 접해 있고 만주에 매장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중국 공업력의 집중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에게 있어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54]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는 완충지역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였거니와 그 곳이 어느 한 쪽에 편입되면 세력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한반도는 팽창의 발판이 되어왔다.[55]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대륙진출과 중국에 대한 봉쇄를 차단하고 그에 대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매우 긴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과 다른 주변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에 심한 위기감과 더불어 국가전략 추진에 제한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지대론'에 입각해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국가 간의 관계, 특히 북한의 존재는 과거부터 경쟁상대로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해양세력(미국·일본 등)과의 직

---

52)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 고려원, 1999), p.18.

53)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군 지원, 1990년대 북한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붕괴의 위험에 처하자 식량과 유류지원,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시 구호품 무상지원 등.

54) 오상학,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남 : 2004), pp.91-92.

55) 민병천, 전게서, p.156.

접적인 위협을 차단하려고 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1980년대 후반 국제정세가 동서화해와 협력체제로 변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남북한 차별정책,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게 되고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변화의 요인은 주변정세의 변화, 중국의 정책변화, 남한의 경제적 발전 및 북방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56]

첫째, 주변정세의 변화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간의 상호관계가 중소협력을 통한 대미견제라는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각기 독립 변수화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남한을 보는 시각도 기존의 남방 삼각관계의 일원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둘째, 중국의 정책변화는 국력이 신장되면서 그들의 대외정책이 기존의 블록중심에서 벗어나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최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한국을 중시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셋째, 남한의 경제발전과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추진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했고, 1980년대 이후 한·중 간 교역량의 급증은 남한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무역에서 탈피하여 교역국가 다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은 한중수교의 주요 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교 이후 오늘날까지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을 입안하고 전개함에 있어서 자국의 안전보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960만㎢의 광활한 영토와 러시아와의 사이에 놓여 있는 긴 국경, 그리고 긴 해안선과 같은 자연적 조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항상 외부의 침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

56) 곽종근,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동향"」, 조선대학교 연구논문, (광주 : 2007), p.13.

3. 국방정책 추세 및 전망

오늘날 중국이 구상하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내용과 그의 추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57]

첫째,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의 입안과 전개에 있어서 자국의 안전보장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19세기 이래 지속된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미국의 봉쇄정책은 그 주요 표적을 중국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대륙진출과 중국에 대한 봉쇄를 차단하고 그에 대비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매우 긴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국에 우호적 지역으로 존재하거나 최소한 완충적 역할을 지속시켜 주기를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고 이러한 안보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역할분리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현상유지적 균형책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방국가로서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남한과는 경제적 동반자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분리정책은 정치에 대한 경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국제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한·중관계가 경제에서 정치로, 나아가 안보적 협력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중국도 한국을 그들의 세계전략 추구에 매우 긴요하고 유익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냉전시기 한국에 대해 극도의 적대정책을 취했던 것은 물론이고 수교 이후 상당기간 북한을 의식하여 경제협력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지도층과 인민들은 앞으로 국제정치의 판도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21세기형 미국의 패권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와 같은 견제에는 일본의 역할이 내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미·일 동맹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저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몇 년간 소소한 의견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57) 상게논문, pp.14-18.

넷째,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 특히 인접국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외면적으로 남한과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섯째,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표면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국가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무엇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참전으로 북진통일이 완수되는 상황에서도 지원군 파병을 결정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대미 견제 역할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한반도 마저 미·일 동맹체제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중국의 안전보장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호금도(胡錦濤)의 신지도체제는 2002년 중공 제16전대회와 3월 제10기 전인대를 통해 「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으며, 국가목표의 두선 순위를 경제발전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① 한반도 정세의 평화안정 기조 유지, ②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③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④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추구, ⑤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피동적 전략태세 출현방지로 설정하였다.[58]

첫째, 한반도 정세의 평화안정 기조 유지로 중국은 미국 등 선진 산업국들과의 긴장 및 갈등관계는 그들 경제발전이나 국가경제에의 통합과정을 심각하게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긴장을 억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긴요한 외교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이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은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확보와 저비용의 안정적 대외간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 외교정책에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

58)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3), pp.19-23.

둘째,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로 중국은 동북아 평화유지는 물론 냉전 이후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지역 협력 등에 있어서 한국과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양자관계를 경제영역으로부터 정치 및 안보영역으로 확대, 전방위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있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지역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경우 한국의 전방위적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양국관계의 탈 이데올로기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대한 전통적·지정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모색하고 영향력을 구축해 가려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추구이다. 중국이 외부 안보환경이나 지정학적 환경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가장 중요시되는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핵무기와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 등 핵 강대국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협보다도 핵 소국이나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보편화는 북핵문제가 그들의 안보나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평가하고 대응해 가는 계기로 작용해 갈 것이다.

중국은 전면적 「小康사회의 실현」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과 관련 안정되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 구축과 유지는 외교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 동북아에 있어서 핵 충돌이나 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기본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에 가져다주는 위협은 그들 안보나 국가이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협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목표를 두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일본, 한국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핵 보유가 동북아에 있어서 핵확산의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에 있어 핵 개발의 도미노 현상 발생, 중국이 핵보유국에 의해 포위되는 사태발전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지역 불안정은 물론 미국의 동맹체제 강화와 MD(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북핵 위기의 장기화는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일본의 핵 무장화 등 동북아 지역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와 평화, 외교적 방식이 될 것이며, 무력사용이나 경제제재와 같은 외교적 압박수단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경제적·안보적 취약성을 탈피하려는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과의 적극적 공조 구축을 통해 북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추구이다. 제15전대회 이후 중국의 對 미·일 관계개선은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조정에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자신이 미·중·일 新 삼각관계의 도전자적 위치에서 탈피해 가면서 미·중 관계를 미·일 관계와 등변적 위치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앞으로 미·일 관계와 미·중 관계를 상호 보완·조화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중·일 관계가 지금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 발전을 이룩해 간다면 미·중·일 新 삼각관계의 불균형 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냉전잔재의 청산과 지역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피동적 전략태세 출현방지로 북한에 대한 절대적 우월권이나 영향력 유지는 중국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그들이 피동적 자세로 전략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자국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중 간의 경쟁관계에서 중국이 밀리게 되는 경우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주도권 상실은 물론 피동적 자세로 전략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어느 한 세력에 의한 통일, 특히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한 통일은 반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이 대한반

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조건으로 대한반도 기득권의 유지, ②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견지(급진적 통일과정 반대), ③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통일에 대한 지지로 정하고 있다.

제 3 절 중국의 국방정책과 한반도 안보

1. 한국의 안보환경

(1) 한국 안보의 현실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변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국제정치와 군사전략 중심의 「高位政治(high-politics)」에서 경제적 국익 중심의 「低位政治(low-politics)」로 관심이 옮겨지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탈이념,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사력의 증강보다는 자국의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발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는 곧 경제이익을 바탕으로 어느 곳이든 개방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국경을 초월하는 「地經學(geoeconomics)」적 지역주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U),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 등 경제협력기구들의 등장은 평화적 경제교류와 지역협력의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사례이다.[59]

탈냉전시대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와 지역의 안전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지역안보협력체제 내지 다자간 안보공동체」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60] 또한 냉전시대와는 달리 국제평화유지군과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국제역할 비중 또한 증대되고 있음 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가 세계정치·경제의 주요 지역으로 등장한 사실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북아가 국제정치에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

59) 류현상,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안보구도 : 주변국 군비경쟁 실태 및 한반도 안보과제를 중심으로",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서울 : 국제안보전략문제 연구소, 2007), p. 1.
60)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 교학연구사, 1999), p. 72.

다. 동북아는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정치와 경제를 3분하여 세계사에 처음으로 동북아, 유럽, 북미 3자 정립(鼎立)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한·중·일 3국만 보더라도 동북아는 참여정부 출범 시점인 2002년에 이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및 유럽연합(EU)과 비교하여 각가 인구는 압도적으로 앞서있고, GDP는 대등한 규모로 성장 하였다.[61] 그러나 동북아 지역이 국제정치에서 독자적 지역단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인구나 경제적인 규모의 성장, 그리고 순수 지리적 부분보다는 역내 강대국간 지정학적 동기에 의해 비롯된 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62] 총 6, 7개의 지역 국가 중 4국이 강대국으로 이들의 지위가 탈냉전 후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가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어, 지리·문화적 구분 의미보다 정치·군사적 의미가 유례없이 부각되는 것이다.

냉전이 끝난 후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30%가 감축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은 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군비 증강은 첫 번째로 미국의 군사적 역할 축소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반작용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무기구입의 영유가 생긴 것은 중요한 이유이다. 셋째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이 지역의 군비증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63] 이중에서도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한국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의 국교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중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4개 현대화 달성을 위하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가 긴요한 입장이므로 전면적인 군사도발 위협을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국방 현대화는 자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한반도 긴장완화 및 전쟁억제, 한국과의 경제협력, 동북아의 안정추구,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이 충돌되는 한반도 유사시에 그 군사력은 북한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61) 박명림, "동북아 시대, 동북아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학술회의 논총 제3집」, (통일연구원, 2006), p. 5.

62) 동북아라는 용어는 1930년대 초 러시아의 태평양지역 진출을 둘러싸고 보이던 중국 및 일본과의 각축을 설명하기위해 미 버클리대 Robert Kerner 교수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면서 '동북아'는 러시아는 물론, 역내에 자국 영토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을 포함하는 지정학적 용어가 됨 ; 신형준, 「한국 고대사의 반역」, (서울 : 조선일보사, 2004), pp. 26-28.

63) 류현상, 전게논문, p. 2.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중국 국방현대화는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보다는 중국을 통한 대북한 위협 감소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장기적인 군사적 대비책도 동시에 고려하여 중국의 군사 대국화가 가져올지도 모를 우리와의 충돌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미래 안보환경

세계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부상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다양한 분쟁요인의 잠재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 및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인한 안보정세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문제, 일·중간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열도 문제, 한·일간 독도 문제 등 영유권 문제와 함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환경오염 문제, 대만 문제, 미사일 방어(MD)체계 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이 산재하여 역내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북아의 안정유지 및 균형자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및 정보·항공·우주 전력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전진배치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환경 변화와 미군의 군사변혁(Transformation)에 따른 능력 신장 등을 고려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함께 해외주둔 미군사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사력에 대한 일정부분의 변화 및 조정이 예상된다.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 체제하에서 2003년 6월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등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적극적인 안보대화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능력을 확보하고, 해양통제권 및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이라크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참여를 통해 국력에 상응한 국제적 역할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에 상응한 전력 증강 및 군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미사일 및 해·공군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미래전에 비한 군사혁신을 추구

하는 한편, 중국 위협론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미국의 다자적 접근을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차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

러시아는 국익중심의 실용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군사력 현대화 및 외교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역할 강화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회복을 위해 군 구조 개편, 병력감축, 부대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정예화, 기동화, 경량화 및 원거리 투사능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된 군사적 대치구도 속에서 안보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여러 가지 안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평화통일은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불안은 계속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미래 안보상황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위협능력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감소하는 이른바 「기울어 가는 위협」으로 변모될 것이며,[64] 향후 21세기는 한국의 국력신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현저한 경제력의 격차 및 미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등을 고려 시 대북 위협보다는 불특정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력 건설에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한 기술·정보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첨단화·정보화 시대의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사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한 군사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세대를 뛰어넘는 개념의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다.[65] 한국의 미래 불특정위협과의 분쟁 요인은 한반

64)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젼」,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8), p.3.
65) 상게서, pp.41-42.

도 주변의 해양 분쟁, 국경선 분쟁, 해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분쟁, 해상 교통로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지리적 전장 환경은 국경선이 짧고 국토가 협소하며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토가 해양에 접해 있다. 또한 인구가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반도를 전장화할 경우 전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받는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특히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이 미래에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영토의 전장화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자국 영토의 전장화는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총 억제전력을 동원하여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전략으로서 한국도 이와 같은 전쟁수행개념에 의해서 미래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① 대부분의 미래 분쟁요인이 국경선과 해양에 관련된 사항이고, ② 미래전의 양상이 장거리 정밀타격무기와 스텔스 무기 등의 발전에 의하여 동시에 광역화될 수 있으며, ③ 주변국보다는 전력의 우세를 보장할 수 없고, ④ 전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구역이 없기 때문에 해양공간을 주 전장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66]

안보환경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주적인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에 의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며, 미군전력의 감축과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의 안보개념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 불특정위협과의 전쟁에서는 미국과의 계속적인 군사동맹 관계가 불투명하며 특히 일본 등 특정국가와의 분쟁 시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더욱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을 지원하기는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66) 상게서, p.157.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해가 상충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북·중간의 전통적 혈맹관계의 질적 변화는 불가피하며 신 지도부의 영향력이 확대 될수록 변화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북·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변화 필요성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념적, 인적 유대의 약화에 따른 현실적 관계변화의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둘째, 중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기존 정치 안보적 유대와 경제적 특혜를 일부 조정된 형태로 유보할 것이다. 물론 특혜의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할 것이며 이는 북·중 관계가 불편해 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중관계가 양자구도에서 점차 복합적 다자구도로 변화할 것이다. 즉 제3자의 개입여지를 주지 않던 양자관계가 축소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남한 등의 관계와 연계된 다자구도 속의 북·중 관계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북·중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북·중 관계에서 비대칭적 특혜보다는 호혜의 비중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 영향력 확대의 틀에 비추어 북 핵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한다.

최근 중국은 과거의 경우에 비해 한반도 비핵화를 극구 강조하고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북 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영향력 확대라는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계로 얽혀 있어 한 강대국의 국방정책변화가 나머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 속에 있다. 특히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국방정책의 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로 인한 새로운 접근관계 등 복잡한 상

황에서 중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방현대화는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한반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13억의 막대한 인구와 핵무기로 무장되고 훈련된 초군사강대국으로 재등장 할 것을 상상해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67]

중국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방현대화를 통해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군의 정예화, 전문화, 혁명화에 역점을 두고 군 인사 및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특히 작전능력을 확대시키고 해양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주변국가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안보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둘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군사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역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지지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와 협조의 폭을 넓혀 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지역안정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1) 군비경쟁 촉진

1) 군사비의 증강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들은 모두 <표 3-1>에서 보듯이 세계적 위상의 국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미래의 전쟁패러다임 발전에 대비하여 군사혁신 차원의 전력체계를 확보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자칫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어 동북아 안보지형이 격변을 거듭할 우려가 없지 않다.[68]

2006년 세계의 군사비는 1조 2,04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미국의 군사비는 5,287억 달러로서 세계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상위 15개 국가의 군사비가 전체의 83%나 된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크게 상승

67) 유방우, 전게논문, p.51.
68) 류현상, 전게논문, p.29.

되었다는 점이다. 1998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 중 81%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지역의 경우는 40% 감소하였고, 미주지역은 9%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국의 군사비(495억 달러)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2006년을 기점으로 일본(437억 달러)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동북아지역 각 국의 국력 및 군사력 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한 국	북 한
영토(㎢)	932만	37.8만	960만	1,708만	9.85만	12만
인구(명)	3억 114	1억 743	13.2억	1.4억	4,904만	2,230만
GDP($) (공식환율/PPP)	13.22조/ 12.98조	4.91조/ 4.22조	2.51조/ 10조	7,330억/ 1.723조	8,974억/ 1.18조	227억/ 400억
병력(명)	150만	24만	225만	102만	67만	110만
군사비($) (공식환율/PPP)	5,287억	437억/ 352억	495억/ 1,182억	347억/ 828억	219억/ 301억	50억/ 100억

출처 : 류현상,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안보구도 : 주변국 군비경쟁 실태 및 한반도 안보과제를 중심으로",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2007, p.29.

중국의 군사비는 지난 17년간 연 평균 15-17%씩 증액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중국의 군사비는 2020년경 일본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현재도 중국의 군사비(1,182억 달러)가 미국(5,287억 달러) 다음인 세계 2위이며, 2020년경에는 약 3,000억 달러 규모로 급증되어 미국과 차이를 크게 줄이고 세계 3위 국가와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공표하는 군사비에는 연구개발, 해외무기 구매, 핵 및 미사일, 방산업체, 경찰 등과 관련된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군사비에 대한 평가 및 추정치는 전문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2003년의 경우 공표치는 223억 달러이나 추정치는 306억-1,410억 달러나 되며, 2007년의 경우 공표치는 450억 달러 수준이나 추정치는 850억-1,250억 달러에 달한다.[69]

69) 류현상, 전게논문, p.30.

2) 전략무기 경쟁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7기를 시험 발사한데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전략무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 두 사건에는 한반도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 강대국들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제의 조기 구축에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미국과 일본의 전략무기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북한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무용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70]

<표 3-2> 2007년 세계 핵전력 현황

구 분	전략핵 탄두	전술핵 탄두	운영 배치	총 보유
러 시 아	3,340	2,330	5,670	15,000
미 국	4,663	500	5,163	9,938
중 국	145	약 200-400	?	200?
프 랑 스	348		348	>348
영 국	=160		<160	<200
이스라엘	=80	=	=	=80
파키스탄	-60	=	=	=60
인 도	=50	=	=	=50
북 한	<10	=	=	<10

출처 : 류현상,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안보구도 : 주변국 군비경쟁 실태 및 한반도 안보과제를 중심으로",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2007, p.31.

동북아지역의 강대국들은 모두 세계 최강의 핵 대국들이다. 미국과학자모임(FAS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이 2007년 5월에 내놓은 「핵 정보 프로젝트」에 의하면 세계의 핵무기 재고는 냉전 정점 시 약 7만기에서 대폭 감소되어 현재 약 26,000기 수준이고, 이중 약 40%가 작전운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프랑스,

70) 류현상, 전게논문, p.31.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250-296개의 발사대와 793-916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105기가 핵탄두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 미 국방부가 작성한 「2006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의 요지이다. 미국 과학자 모임은 폭격기 탑재 핵무기 40기를 추가하여 전략핵을 145기로 추정하였다. 중국이 1998년부터 개발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잇는 전술핵을 합할 경우 중국의 핵무기는 총 200-400기에 달한다. 「2007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06년 10월 기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약 900기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기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국방현대화를 위한 방대한 국방비의 투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커다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병력규모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이며, 국방의 현대화를 통한 무기의 첨단화 및 과학화, 군 구조개편을 통한 군대의 정예화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작전능력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을 유발함과 아울러 커다란 안보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중국이 구상하는 현대판 중화세계의 실현을 가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작전능력과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 지역의 세력불균형 초래 및 군사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곧 신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고 있는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양국 간 군비경쟁으로 대립 및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례로 일본은 최근 페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동 배치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71]

또한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상태가 파괴될 경우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의 위협에 직면하고 되고, 남·동쪽에서는 일본의 강력한 해군력에 의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내 도서 영유권의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문제, 어획권에 관한 문제 등 제반 국가

71) 일본 자위대가 내달 방위성이 위치한 이치가야 등 도쿄도 내 10개 장소에서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동 배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정밀무기 운용에 필요한 통신환경과 장애물 유무 등을 면밀히 조사, 도쿄 중심부를 겨냥한 외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국방일보,2007. 11. 26)

이익을 둘러싼 한·중·일 간 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이익확보와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 국은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국방 현대화를 통하여 무기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현대전에 부합한 첨단무기를 점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에게 군사기술의 지원, 무기판매, 원조 등이 이루어질 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한·중 경제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불안 증대로 결국에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각각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결국 중국의 군사력증강은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최신무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협력 분야에 크게 제한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안보위협 증대

중국의 군사력증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지원 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사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북한간의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유사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병력 및 무기의 제공은 물론,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의 심양군구에 배치된 신속지원군을 북한지역에 투입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의 무력남침 도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은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지상군만의 인민전쟁 개념 하 인해전술이 아닌, 보다 질적으로 현대화된 해군력과 공군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현대전 양상의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한 제반작전 수행 시 서해에서 해상 우세권, 공중 우세권 확보 및 상륙작전이 중국의 해·공군력에 의해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군사과학기술의 이전 등의 군사지원

능력이 신장되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대남 전략 수행에 유리하게 작용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성이 된다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 및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한·중 간에는 남·서해상의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분쟁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시 양국 간 중첩수역 발생에 대한 문제, 한·중 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존자원의 부족사태로 인해 서해상에서의 해저 유전개발 문제,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한·중 항로와 남방 항로가 중국의 작전해역에 속한다는 점이 무역 분쟁 발생 시 해상봉쇄 위협의 직면 문제, 서·남 해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문제 등의 분쟁요인이 항시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대로 군사력 투사 능력이 한반도로 확장되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해저 자원개발, 해상 교통로 확보, 불법어로 행위 등의 분쟁 요인에 대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압력 행사 및 분쟁이 발생 하거나 정치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될 시 서해는 물론 남방항로 등 해상교통로에서 한국의 선박과 함정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군사위협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3) 남북통일 지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하거나 통일에 대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결국 북한 지역은 중국이, 남한 지역은 일본이 그 영향력의 우월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극적인 타협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중·일 양국은 한반도지역에서 통일된 단일국가의 탄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의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한국인화가 가속화 될 것이

며, 이에 따라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변경지역에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접경을 한다는 점에서 안보부담이 가중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영향력 행사에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또는 무력에 의한 통일의 경우에도 결국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력대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한반도에서 일본에 필적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한국'이하는 세력의 등장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이 누리고 있는 '남·북한 동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현상유지 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원하고 있는 바이다.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현 국제정세와 중국과 일본의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 전쟁억제와 한반도 안정유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균형적 조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중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원하고 있는 對 한반도 정책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특수한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동반자의 입장에서 중국의 이익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무모한 무력남침을 자행할 경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력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로인해 남한과 우방국의 관계

에 있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나아가서는 UN과의 충돌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무모한 남침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위해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을 바라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의 협력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중국의 통일정책인 「일국가 이체제론」을 한반도에 적용시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꾀함으로써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공유하고, 한반도에 대해 유일한 강대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을 억제하고 특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존속시키고, 현상유지를 시키기 위해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중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제 1 절 대응전략의 개념

1. 대응전략의 개념

대응(對應)이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또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을 이루는 일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72]

전략(戰略)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비롯된다. 전략의 어원인 「strategos, strategia」는 장군 또는 「장군의 지도술(generalship, art of general)」을 의미한다. strategia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구조로 볼 때, 집정관이 야전 최고사령관을 번갈아하며 수행하였기 때문에, 「장군의 지도술」이면서도 「정치 우위의 민군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전략개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주왕조 초기에는 순수한 무인의 행동에 관한 군사적 의미로 한정되었다. 춘추전국시대의 전략은 무력과 권모를 동시에 구사하여 정치를 지향하는 패권을 위한 정치수단으로 변모되었다. 이로부터 전략은 군사적 개념 외에도 비군사적 개념을 포괄하는 복합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전략에 대한 정의와 견해는 군사학 분야만 하더라도 다양하며, 이러한 전략은 관점, 시대상황, 전략분석의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73]

전략의 개념을 확장하고 최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미국의 Edward Mead Earle이다. 그는 1943년에 "전략은 군사력을 포함하는 일국 또는 연합국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여, 그 중대한 이익을 실제의 적, 잠재적인 적, 가상 적에 대해 증진·확보한는 술"이라고 기술하였다.

군사학에서 사회과학으로 전파된 전략개념은 기존의 경영정책(business police)을 대체하면서 경영전략, 전략경영, 전략적 사고, 전략적 기획이라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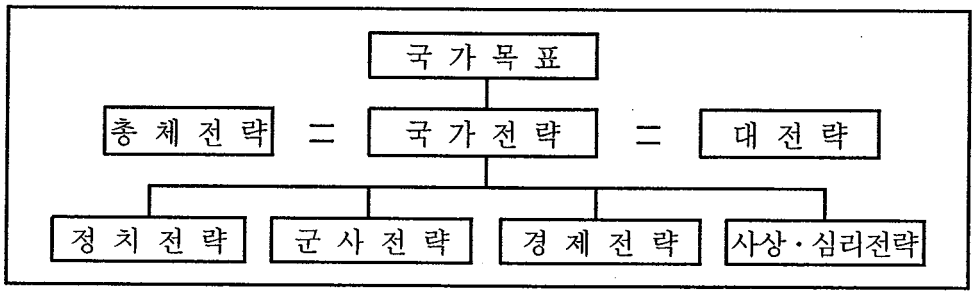
72) 인터넷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kind=all, (검색일 : 2007. 12. 26)

73) 강용배, "민·군간 전략적 리더십 연구사례 분석",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서울 : 국제안보전략문제 연구소, 2007), p.162.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략이라는 용어정의가 다양한 것은 전략자체의 본질이 전략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이 담당하는 추상적인 부분과 실제 기획자들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것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74]

전략체계는 <그림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있고, 국가전략은 총체전략 또는 대전략이라고도 부른다. 국가전략수행을 위한 하위전략체계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었으나 보통 정치전략, 군사전략, 경제전략, 사상·심리전략으로 구분한다.

<그림 4-1> 전 략 체 계



출처 : 강용배, "민·군간 전략적 리더십 연구사례 분석", 「제1회 국제안보학술회의」, 2007, p.164.

전략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은 다양하게 정의 된다. 미국의 국방정책 보고서는 국가전략이란 "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자연과학적, 지리적, 정신적, 군사적, 일체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총체적 계획이다. 이것은 국가정책의 지시에 따른다. 흔히 대전략은 국가전략이라 불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연수소에서 발간한 용어집은 국가전략을 "국가목표의 달성, 특히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평시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 등의 제 역량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전략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국가전략개념을 발전시켜 <그림 4-1> 전략체계와 같이 정립하고 있다.[75]

국어사전에서는 전략을 "군사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략(策略), 전술(戰術)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또는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책략"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군사용

74) 상게논문, p.164.
75) 상게논문, p.165.

어사전[76]에는 전략을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 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는 술(術)과 과학(科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대응전략이란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여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문서에서의 대응전략이라 함은 "중국의 국방 현대화를 포함한 대한반도 국방정책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취하는 행동"을 뜻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의 국방정책과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문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안보대응전략 계발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중국 국방정책의 개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서술하여 제시하였으며, 최근 중국 국방정책의 특징이며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군의 현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방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의 한반도 인식, 중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에 대해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4장에서 국방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 한반도 국방정책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정치·외교 분야와 국방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본 장에서는 제시하고자 한다.

---

76) 육군본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 2006), p.52

제 2 절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전략

1.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계 확립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남한 또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북한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대북정책은 상대인 북한의 실제를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의지, 역량, 환경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정확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77]

현재 북한은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작고 있다. 그 첫째의 문제점은 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된 정전협정[78]을 노골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전협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남한이 전쟁으로 비화되도록 심각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으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전쟁으로 확정되도록 방치하여서도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화해와 교류에 의한 평화를 논하더라도 안보 역량만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차단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안을 마련해야 한다.[79]

결국 북한은 합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안보 역량과 화해와 협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한반도 평화구축은 난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는 남한이 당사자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누가 당사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

현재 남한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남북한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

77) 김부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중앙대학교 연구논문, (서울 : 2006), p.74.

78) "국제 연합 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 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79)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서울 : 세종연구소, 1998), p.73.

의 경우 그렇지 않다. 북한은 주장하기를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당연히 북한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소위 「실질적인 당사자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처리하는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되어야 하며, 남한은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로, 첫째는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싸운 주역은 북한이며, 둘째로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을 서명할 때에도 당사자였으며, 셋째로 미국은 현재 미군을 남한에 불법으로 주둔시켜 놓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넷째로 새로운 평화협정 체제를 수립하는 문제가 아니며,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평화 보장을 위한 협정체결이 필요 없다는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80]

하지만 북한만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유엔에 이미 국가로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생각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노함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들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대체로 「남북한 당사자론」, 「남북한+미국, 중국 당사자론」, 「남북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사자론」, 「남북한+참전 18개국 당사자론」의 4가지를 들 수 있다.[81]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남북교차 승인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심리전, 외교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대내적 난관을 호도키 위해 대외적 도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또 다른 동북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용하여 남북한 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남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에 따른 시대 정신과 민족주의적 공동기반 위에서 중·일 패권 경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민족 공동체를 구축하여 강력한 통일 한국을 만들 때 동북아 5각 구축을 통한 세력 균형 모델이라는 보다 안정된 체제가 작동될 것이다.[82]

---

80) 상게논문, p.177.
81) 상게논문, p.178.
82) 이기종, 「남북한의 국제관계와 안보외교」, (서울 : 동림사, 1999), p.66.

지난 반세기 동안은 사실상 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은 남북한 간에 너무나 골이 깊은 심한 불신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당사자가 되는 소위 「6자 당사자론」은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에 지금까지 관여할 능력 면에서 그리고 여유 면에서 가능한지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참전국이 아닌 일본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서 참여할 당사자인가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을 포함한 참전국들 전원을 당사자로 참여케 하는 20개국 당사자론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간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 참여케 한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경우 한반도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소위 「4자 당사자론」이 다른 방안들에 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당사자들끼리는 사실상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유민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형평성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83]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견지하는 기조 속에서 6자회담은 남북한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며,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를 지원하고 촉진시켜나가는 보장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84]

한반도 주변의 통일 환경은 냉정체제의 붕괴로 인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한국의 힘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있으며, 정부와 경제 위기 또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갈수록 꽁꽁 얼어붙어 있다. 한반도 문제는 그 분단에서부터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부각된 이후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

83) 송대성, 전게논문, pp.188-189.
84) 김부배, 전게논문, p.76.

미·북간 핵관련 협상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미·북 관계 개선과 일·북 수교 문제들과 같은 사안들은 남북 관계가 국제 문제화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대북 정책 추진에 앞서 현대 국제사회의 시대사적 세계의 흐름은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정치·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 4국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이해관계 및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자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략적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는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에 상대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제화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 즉,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틀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통일 주도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통일 주도권 확립을 위해 대북정책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외교 역량의 강화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주변 4강은 입장은 입장을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여 남북 관계도 강대국 관계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들은 남북관계를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간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남북이 직접 협상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도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불과 9.1%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통해서도 한국의 외교 능력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 주도권 확립을 위해서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축과 교역대상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 틀 안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양자 간의 협력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 한·일은 미·중의 이해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경우 한·일은 그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산업구조와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미·일에 대한 무역의 편중성과 기술 의존도 미국시장 의존도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남한 군사적 자립도 군 장비 체제나 기술의 수준에서도 심각한 미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법적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지역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왔다. 한국군

의 실질적인 역할 신장과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저하, 군정 대표의 한국장성 배치, 중국의 군정위 철수, 북한의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 감독위 대표단 축출 및 사무실 폐쇄 등 이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협상자는 남북한 당사자이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각국 반응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이다. 통일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간의 거래 및 접촉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상대방 동기를 부여하여 상대방의 태도·인식 및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술, 문화, 예술, 체육교류 등은 국가 간의 이해와 공동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한편,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따라서 교류·협력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이 만족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류·협력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교류·협력을 북한 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학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점차로 그 범위와 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적, 물적, 교류·협력의 확대는 장기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의식과 가치관에서의 공유점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민족 동질성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월드컵 축구,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과 문화, 예술, 체육 접근을 모색하여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문화, 언어, 풍습을 이해해 나가고 자연스럽고 친밀한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마지막 냉전의 산물로 남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를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휴전선 일대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냉전의 지속은 한반도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현실적으로 남북의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확대 재생산 시켜 왔다.

남북관계는 대립과 불신 속에서 민족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남북관계가 냉정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으

로부터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상대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 상호 이해의 출발은 화해에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대내외 현실을 감안할 화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생존전략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적 통일의 달성이 남북공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남북대화 및 경협이 흡수통일 정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경협은 정·경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남북 공존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남북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설정 제시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유효한 수단인 군축과 핵 확산방지,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한 군사력의 철수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전 민족의 의사보다는 최고 지도자들의 통일 방안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이는 곧 남북 관계가 남북한의 지도자들의 통일 방안의 변화에 좌우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남북 간에 민족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지도자들의 통일 방안만이 있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실패하였음을 뜻한다. 즉,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지도자들의 능력과 노력이 한반도 민족 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용하여 통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85]

북한이 개방을 하고 핵 위협을 하면서까지 서방의 원조를 구하는 것은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북한은 의식주 조차 충족시키지 못 할 정도로 경제가 피폐해 있으며,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 주민이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외부 세계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권은 소위 「선군정치」의 슬로건 아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단 기간 내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85) 12월 19일 총선이후 각종 언론매체들은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최근에 국민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과 국제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경제적 생활에 비추어 이는 한반도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국제화, 개방화를 한반도 주변 4강과 함께 지원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전에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동질서 회복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염원인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다자간 안보체계 구축

과거의 수동적 외교 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역 협력이나 지역분쟁 그리고 국제 정치의 중요 이슈(Issu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는데 외교력이 모아져야 한다. 특히 유엔 등 세계기구와 다자간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86]

다자간 안보 협력체(혹은 협력 안보체, 안보협력)란 매우 다변적이고 포괄적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인접국가 혹은 안보 문제에 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3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안보의 달성을 위하여 안보협력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87] 즉, 회원국들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다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 외교의 성격이 강한[88] 안보체제라고 하겠다.[89]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동ㅂ구아 지역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 역내 국가들의 갈등요소를 제거하고 안보위협요인을 줄이는

86) 이기종, 전게서, p.300.
87) 김부배, 전게논문, p.81.
88)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 민족통일 연구원, 1993), p.11.
89) 이에 비해 집단안전보장은 협력안보체제 처럼 다자안보기구 중의 하나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차별화 된다. 즉, 집단안전보장체제는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안보 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 간의 힘의 배분상태에 기초한 평화유지 장치"를 의미하여 동시에 "소속된 회원들이 기존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현상유지 지향의 안전장치"를 뜻한다. 집단안전보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국제 연합을 들 수 있으며 집단안보체제는 동맹보다는 결속력이 약하지만, 안보협력체보다는 결속력이 강하다.

데 있어서는 안보 대화, 협력체제 구성, 안보 신뢰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구상방안에는 한국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6개국만으로 국한시키는 소지역적 접근방안과 기존의 ASEAN이나 APEC 등의 광역적 다자간 대화기구를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일 등 3국이 정례적인 3자 안보협력 대화체를 창설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 이익에 가장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방안은 현 한국 정부에서 제안한 동북아 6개국 중심의 소지역 대화체라고 볼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첫째, 분단관리보다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갖는다. 한국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와 영향력을 갖는 미·일·중·러 위주로 안보 대화를 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한국이 동북아에서 소지역 중심의 안보대화체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익은 다자간 안보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 이러한 대화의 장에 참여하여 투명성 증대와 신뢰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북한은 협의체내 국가들의 협조로 외교적 고립의 탈피는 물론 경제난 해소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각국이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는 동북아의 특수한 안보구조를 고려할 때, 다자간 안보대화 구성 노력이 협조 체제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역내 국가들 간의 군사비의 규모 역시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90]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6자 회담을 추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자적 협의에 의한 신뢰구축의 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자적 협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만이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91]

---

90) 홍규덕,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 이론과 실체",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1994), pp.13-14.

따라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끌어 내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가능성을 높인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주변 4강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면 현재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주도권을 잡기에는 제약을 받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 행사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아·태 지역을 공동지배 하거나 그들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 내에서 지역방위태세를 점차적으로 확충하면서 국제적 공헌을 통해 영향력을 도모하고 있다. 미·일 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긴장되는 가운데 중·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에서 장기적 역할 변화 가능성에 따른 중·일간의 지역 질서의 주도권 경쟁 가능성, 중·일 군사 현대화에 따른 군사적 위협 가능성과 정치적 역할의 확대 가능성은 지역 내 중소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에 패권세력의 등장을 방지하면서 지역 국가들 간의 군비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안보 협력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정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변 4국간의 느슨한 세력균형체제가 미국을 균형자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역학 관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주변 4강은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 이익 지대로 보고 있다.

앞으로 주변 4국간의 관계가 협력보다는 대립으로 나간다거나, 특히, 중·러와 미·일의 대립구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는 이들 4강의 권력 각축장이 되어 장기적으로 평화체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이들 4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유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동적으로 불안정한 전략정세를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국방력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에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통일 한국의 주변 4국의 이익과 합치된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이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안고 있다. 즉, 이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남북한 관계의 긴장과 대결 구

91) 김부배, 전게논문, p.82.

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장치의 보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의 공조 하에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안보체제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하겠다. 그리고 남북한의 합리적인 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화체제의 구축적 의미가 있고 또한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지역적 안정화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92]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3.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강화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강대국이라고 하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도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독자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의 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국방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황 하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동맹이 중요한 상황이다. 동맹이라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닌 타 국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 한·미 동맹관계

부시(Bush) 행정부는 2001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의 중심축은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군을 신속배치군 형태로 전환하며,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에도 미군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지사하기도 했다.[93]

미국이 부시정권 등장 후 일방주의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9.11테러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는데,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일고 노무현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북한 핵에 대해 미국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초강대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일방 주의적 정책 즉, 자율성의 양보를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94]

---

92) 정경환,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부산 : 세종출판사, 2004), p.89.
93) 국방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동향」, (서울 : 국방부 군비통제 제32집, 2003), p.200.
94) 김부배, 전게논문, p.88.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다자 협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더욱 제약을 받을 것인데, 이는 동맹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강대국이라도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NGO들은 미국의 대 북한 강경책과 MD(미사일 방어)체계 추진에 대해 연합하여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동맹의 연루와 포기개념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현재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겪고 있다. 북한을 보는 시각에 있어 한·미 양국 간 엄연한 차이가 존재함으로서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실존하고 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 붕괴를 비롯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르는 것으로 강대국과 연루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 간에 기존의 안보질서에 대한 현상유지보다는 국가들 간 경제 협력과 경의선 및 동의선 연결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중심 국가로 도약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즉, 군사측면에서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간 공조를 유지하지만,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 전략에 대한 한·미 간의 미묘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될 대까지 한·미 연합 억제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 후에도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동맹의 파기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룹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해 왔다. 더그 밴도우(Dugg Bendow)는 "한국의 국

력이 북한의 20배를 초과한 지금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자주적 결단과 자주국방을 저해하고 미국에 대한 영구적인 의존을 조장하고 있다,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 군대와 자원을 희생시킬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미 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왔다.[95]

그런데 2003년 대규모 촛불시위, 반미 데모와 주한미군에 대한 폭력행사 등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전진 배치한 미군들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는 신속배치군 형태로 지상군을 전환시키면서 해·공군 전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용산기지의 교외 이전 문제도 한·미 연합 토지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 계획들이 9.11테러 이후 연기되었으나, 한국 내 반미감정의 불출과 더불어 시기를 당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대다수 안보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주둔정책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부응하여 단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표 4-1> 미국의 4단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전력투사거점(PPH) Power Prjection Hub	주요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s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s	협력적 안보지점(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
대규모 병력·장비 전개 근거지	장기주둔 상설기지 인근국가와 상호협조	유사시 대비 시설 준비 소규모 병력 상주	소규모 연락요원 및 최소한의 훈련장시설 유지

출처 : 이근석,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안보정책의 발전방향」, 2004, p.216.

지금 한·미 동맹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할 것은 2005년부터 일어난 감정적 논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고 국가 이익에 근거한 냉철한 계산과 전략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한·미 동맹의 전제가 되어 온 북한의 위협과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면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양국은 북한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

북한의 선군 정치를 변화시켜 핵개발 위협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위

95) 김부배, 전게논문, p.89.

협 평가와 대처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 동북아의 미래 전략 환경 평가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활용하여 어떤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지 토의해야 한다.

(2) 한·미·일 공조 체계

동북아 한·미·일의 이른바 남방 삼각관계와 북·중·소의 북방 삼각관계가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불안한 평화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중·일의 영향력 증대와 러시아의 상대적 쇠퇴라는 동북아 세력 균현의 변천 과도기에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역할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대결 구도에서 주변 강대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에 유리한 균형된 외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기존 안보 협력국인 미·일과의 긴밀한 유대를 지속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96]

현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도는 한·미·일 삼각안보 공조 체제로 미·일 안보 체제가 간접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반도 안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방위비 소멸을 주장하는 국내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기존의 공약을 계속 준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원을 받는 안보 면에서의 미국 주도의 지속이라는 양상은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97]

한편으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지원 받아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미국의 견제 속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잠재적 군사강국으로 동북아에서 정치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좋은 안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과 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안보동매관계 및 미·일 안보동맹관계를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이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실

96) 신정현 외, 「21C 한국의 선택 : 국가체제와 정책과제」, (서울 : 우석, 1998), p.560.
97) 이종호, "미·일 신안보체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서울 : 1998), p.109.

질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다자 안보대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98]

결론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한국의 안보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동북아 국제 관계 형성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균형된 외교 노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축으로 하여 한·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국방정책 분양의 대응전략

1. 국방정책의 발전전략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후 10여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마침내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99]

우리의 대중국 국방정책의 목표는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중국 군부의 계속적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평화통일에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중 양국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중국과 군사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양국군사관계의 발전은 점차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조성태 국방부 장관의 방중은 한·중 수교 7년 만에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문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 군사교류 협력 발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양국 국방장관 간 안보관련 공통이해를 확인하고 중국 군부에 대해 우리의 대북포용 정책을 설명, 중국군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등 한국전쟁 이후 양국간 군사적으로 불편했던 관계를 협력적 차원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양국의 국방장관 상호방문은 2000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2001

98) 김부배, 전게논문, p.91.
99)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제3차 한중 외교안보대화 참가 결과」, (국방부, 2007), p.8.

년 김동신 국방장관의 방중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 가속화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양국간 균형적 군사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의 합참의장 방중, 중국 총참모방의 방한 및 각군 총장의 방중 등 군고위급 인사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2005년 3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표 4-2> 한·중 주요 인사교류 실적

년 도	訪 中	訪 韓
1992	◦ 이필섭 합참의장(대통령 수행)	
1994	◦ 이양호 합참의장(대통령 수행) ◦ 유정갑 정보본부장	
1995	◦ 조성태 정책실장(2월)	
1996	◦ 서태석 정보본부장 ◦ 양상태 제1차관보	◦ 국방부 외사국장(12월)
1997	◦ 박용욱 정책차관보 ◦ 이정린 국방차관(11월)	
1998	◦ 이상희 정책기획국장	◦ 부총참모장(8월)
1999	◦ 조성태 국방부장관(8월) ◦ 이종욱 정보본부장(7월) ◦ 차영구 정책기획국장	
2000	◦ 조영길 합참의장(8월) ◦ 이수용 해군총장(4월)	◦ 국방부장(1월)
2001	◦ 길형보 육군총장(3월) ◦ 김동신 국방장관(12월)	◦ 공군사령원(3월)
2002	◦ 이억수 공군총장(2월) ◦ 황규식 국방대총장(4월) ◦ 권영효 국방차관(8월)	◦ 국방대학교장(3월) ◦ 제남군구 정치위원(7월) ◦ 총참모장(8월)
2003	◦ 김종환 합참의장(11월) ◦ 김창호 정보본부장(9월)	◦ 부총참모장(3월) ◦ 국방대부교장(9월)
2004	◦ 권영기 국방대총장(4월) ◦ 문정일 해군참모총장(10월) ◦ 안광찬 정책실장(12월)	◦ 심양군구 사령원(11월)
2005	◦ 윤광웅 국방장관(3월) ◦ 이한호 공군총장(7월)	

출처 :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2007), 국방부 내부자료 참조 필자 재작성.

하지만 그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의 군사교류는 중국 군부의 보수

적 성향과 기존 북한과의 유대관계 등으로 인하여 다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재하고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중 군사교류의 물고를 튼 체육교류는 1992년 군인 체육선수단 상호교류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축구·농구·핸드볼·조정·유도 등 여러 체육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우의를 다져오고 있으며, 한반도 지역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한·중 국방학술회의」는 10차(2005년, 북경)회의를 실시하여 연례 국방학술회의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사교육 교류분야에서는 1999년 최초로 뤄양 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에 3명의 장교를 파견한 이래, 매년 육·해·공군 3명의 장교들을 파견시켜 중국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방대학 단기과정 및 군의대학 연수를 통해 한·중 군사교육 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교육 대표단의 군사 교육기관 상호방문(2002년 방한, 2003년 방중)을 통하여 군사교육 교류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해·공군간의 교류로는 2001년 한국 해사생도 순항함대가 중국을 방문하였고, 2002년 중국 해군함정이 방한하였다.

또한 2002년 한국 공군 수송기가 중국을 방문하였고, 2003년 6월 중국 공군 수송기가 방한하였다. 마침내 2003년 한국 해군 함정과 2004년 항공기가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바야흐로 양국 군사관계가 군사교류의 정례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 국방정책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군사대비를 위하여 중국 등 주변국 군사력 건설 방향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

한국군은 대북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해·공군의 상대적 열세를 초래하였으나, 통일 이후는 영토 전쟁보다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 독도문제 및 해상교통로 확보 등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해상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의 전투력을 해·공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교정치상의 능력향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좋은 예로 「2007 국제해양방산 전시회」에서 독도함의 위용을 국제무대에 선보였으며,[100] 「이억기함」은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 훈련에 참가하여 한국 해군의 위상을 떨쳤다.[101] 얼마 전 육군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터키와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터키 지상군대표단과 육군 대 육군회의를 개최했다.[102] 또 최근에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 국방장관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동반자적 군사협력 지속발전을 약속하였으며,[103] 한국과 독일 간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증진을 논의하였다.[104] 이와 같이 한국군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 한국군의 우수성과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미국이외의 타국과도 우방국으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첨단 정예군사력 건설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재정대비 및 GDP대비 국방비 배분 추세는 하향되고 있으며, 1999년 금융위기 이후 국방비는 GDP대비 2.8%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 국방비의 하향배분으로 계획된 군사력의 건설은 연기 내지는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의 규모는 세계 59위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며,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도 약 266달러 수준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중장기적인 국방목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세계 평균국방비 부담률에 근접하는

---

100) 지난 2일부터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2007 국제해양방산전시회(LIMA 2007)」에 한국 대표 함정으로 참가한 아시아 초대의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시회장에 마련된 기자실에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함정 중 유일하게 독도함에 대한 제원과 자료, 사진 등을 게시해 놓고 있다. 18개 내외신 매체 기자들이 독도함의 제원과 진수일자, 승조원, 무기체계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어떤 참가 함정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일보, 2007. 12. 7)

101) 한국 해군의 이억기함(1200톤)이 호주 근해에서 실시한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 참가, 성공적인 훈련 수행을 통해 한국 해군의 위상을 떨쳤다.(국방일보, 2007. 12. 7)

102) 육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계룡대에서 방효복 참모차장 주관으로 터키 지상군 사령부 참모장 아틸라 으슥 대장 등 터키 지상군대표단과 육군 대 육군회의를 개최했다. (국방일보, 2007. 12. 6)

103)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에르베모랭 프랑스 국방장관 초청으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불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군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양국 국방개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등 21세기를 대비해 동반자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국방일보, 2007. 12. 17)

104) 제8차 한·독 국방정책실무회의가 17일 독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발전, 최근 동북아 정세와 유럽지역 군사동향 등을 평가분석하고 토의했다. 또 양국의 국방개혁추진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독일의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내년 양국간 군사교류와 방산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국방일보, 2007. 12. 18)

국방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확보된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전력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해군력에서는 주요수상전투함을 현대화된 최신함정으로 건조하고, 공군력에서도 주변국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로 전력화해야 하겠다.

2. 국방개혁의 추진

현대국가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방태세 확립, 국가생존성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국방개혁이 필요하다.[105]

국방력의 성장과정에서 우리 군은 안보한경의 변화에 부응한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차례의 국방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의 개혁의지 부족, 각 군간 이해 상충 및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은 추진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지금까지 병력위주의 양적구조 유지, 3군 균형 및 합동성 발휘 제한, 정보 및 정밀타격전력 미비, 독자적인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발전의 소홀, 국방운영의 일부 비효율성의 잔존, 그리고 전근대적인 병영문화의 지속으로 인한 대군 신뢰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반면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안보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과학화·첨단화·정예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동북아의 역학구도 하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선진 정예강군 육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군의 현 체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안보도전과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군 내외에 확산되어 왔으며,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국방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방개혁을 국가차원의 역사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에 부응하여 국방부는 대통령의 전략지침인 협력적 자주국방의 일환

105)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북코리아, 2006), p.325.

으로 추진해 온 국방개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방개혁 비전을 설정하여 「국방개혁 2020」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106]

국방개혁 추진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로서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민중심에 입각한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통해 각 군간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국방운영을 위한 중심철학 및 사고를 군 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에 대한 문민통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에 대한 문민화 및 국방개혁을 단행해 왔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플럼북(Plum Book) 리스트에 의해 관리되는 국방성의 국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 55개 중 50개 직위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직 90% 이상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안보전문분야 전문가, 정부부처에서 경력은 쌓은 행정관료, 방산 업체에서 종사하던 방산전문가나 직업군인 출신인 예비역들이다.

군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인들에게 그 중요한 구강문제를 어떻게 일임하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 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성 국실장 예하에는 육군·해군·공군의 경력 있는 전문 직업군인들로 구성된 현역 참모들이 편제되어 군사전문성을 가지고 이들을 보좌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들은 편제된 군사전문가들이 작성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최선안을 선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사전문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미국 국방관료들의 설명이다.

둘째, 병영문화 분야이다.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고 군 복무를 인생의 발전기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영문화와 복무환경을 선진 민주국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복무생활 개선·복무제도 개선 및 사고 예방체계 정립, 장병의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셋째, 군 구조 및 전력분야로서 미국의 미래형 부대처럼 기동성이 높고 첨단무기로 무장,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국방개혁 2020」에서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다. 육군은 1·3군을 통합해 지상 작전사령부로 단일지휘체제화하고 2군을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육군 전술C4I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

106)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서울 : 국방개혁위원회, 2005), pp.4-5.

하지 못하였다.

군단도 4개를 줄이고 사단은 47개에서 20여개로 감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단과 군단이 편성되면 현재 15km인 사단 정면이 30km로 확대되고 군단은 정면이 30km에서 100km로 확장된다. 그렇게 되면 7개 군단이 맡아오던 155마일 휴전선의 경계를 4개 군단으로 가능해 진다. 그만큼 신형 사단과 군단의 전투력과 기동력이 강화는 것이다.

해군도 잠수함의 은밀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숙원사업이었던 기동전단도 만들기로 했다. 제주도에 모기지를 둘 기동전단을 제주도 남방에서 필리핀까지의 해상수송로로 보호는 물론 해상 테러와 해적 차단 등 국제적인 기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될 때에도 기동전단의 보호를 받고 현지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 함정은 현재 120여척에 7만톤 이지만 2020년에는 70여척에 12만톤으로 바뀐다. 함정이 대형화 및 첨단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대형화 추세에 있는 중국 해군과 첨단화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에 필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병대는 대대급에 대한 상륙작전 능력을 연대급으로 증강하는 대신 병력을 4,000명 줄일 방침이다. 해병대의 정신력에 미해병처럼 첨단무기를 장착해 전투의 선봉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군은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2003년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나 2002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공군의 역할은 혁혁했다. 개전초에 충격과 공포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공군도 앞으로는 최신예 전투기인 F-15K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비롯,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500대 수준인 전투기를 420대 규모로 줄이더라도 전투력은 월등히 제고된다는 것이다. 작전범위도 한반도 전체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위협이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각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합동성이다. 이 합동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적을 감시 및 탐지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곧바로 타격할 수 있는 역동체계가 중요하다.[107]

---

107) 신 정, "한국의 국방개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방조직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서울 : 2007), pp.73-74.

3. 대응군사 전략 계발

(1) 한국과 중국의 주요 군사력 비교

우리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력은 절대적인 열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통일한국의 안목을 가지고 강대국의 군사력 앞에 무조건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것이며, 핵심전력을 확보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 한·중·일의 군사력 비교

구 분		중 국	한 국	일 본
병 력	지상군	183만명	56만명	15만명
	해 군	23만명	6.7만명	4.2만명
	공 군	42만명	6.3만명	4.4만명
	총병력	248만명	69만명	23만명
지상군	사 단	80개	49개	12개
	여 단	-	19개	3개
	전 차	9,300대	2,360대	1,080대
	장갑차	5,500대	2,430대	840대
	야 포	15,700문	5,200문	800문
	헬 기	143대	610대	463대
해 군	수상전투함	53척	10척	54척
	지원함	189척	20척	40척
	잠수함	71척	10척	16척
공 군	항공기	455대	70대	190대
	전투기	3,000대	560대	363대
	정찰기	290대	40대	26대
	지원기	635대	210대	213대
예비병력		120만명	304만명	4.6만명

출처 : 하원훈 , 「중국의 안보정책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2004, p.54.

중국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지상군 보다는 해·공군의 비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상군은 중국

이 우리의 약 3배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영토가 광대하고 남한과 직접 접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은 희박하여 지상군의 전력 비교는 별 의미가 없으며, 한국의 육군도 중국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억제 및 방어력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해군력의 비교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수상전투함정이다. 수상전투함정은 근해를 넘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함, 대잠, 헬기탑재, 대공방어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톤 이상의 크기가 필요하다.

<표 4-4>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상전투함 비교

구 분	중 국				한 국			
구축함	급 수	톤 수	보 유	소 계	급 수	톤 수	보 유	소 계
	현대급	8,000t	2(2)	29(7)	이순신급	4,400t	1(2)	4(2)
	Luhai급	6,600t	1(5)					
	Luhu	4,200t	2		광개토 대왕급	3,500t	3	
	Luda	3,670t	16					
	Jiangwei II	3,100t	8					
호위함	Jiangwei I	2,250t	4	4	울산급	2,150t	9	9
초계함	Jianghu	1,700t	30	30	포항급	1,300t	26	26
	총 계		63척		총 계		39척	

출처 : 하원훈 , 「중국의 안보정책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2004, p.55.

전체 주요 수상전투함의 수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근해작전용 초계함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이 헬기 탑재 구축함을 29척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4척에 불과하다. 함정의 시스템 면에서 보면 중국의 함정은 대함미사일 근접방어 무기인 CIWS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구축함과 프리깃함 중 약 반수만 단거리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지휘통제, 전자전 및 대잠전 체계도 구식수준이어서 같은 급에서는 우리함정이 골키퍼CIWS와 RAM을 보유하고 있고, 스텔스 설계를 도입하여 다소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0년경에는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신예함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해군의 잠수정은 재래식으로 평가되는 밍급과 로미오이 주종

을 이루고 있으나 러시아에서 '킬로'급을 도입하였고, 현대식으로 발전된 송급의 도입은 종전에 비해 잠수함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잠수함 전력에서는 한국이 1/5정도로 열세이나 중국은 노후함정이 많고 한국은 최신 체계로 무장되어 있어 제한전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P-3C대잠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형 송급은 동급의 서방 잠수함에 근접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어 다수 건조로 구형함을 대체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콩고급 이지스함 4척을 포함하여 54척의 수상전투함 가운데 40여척이 헬기탑재 구축함이며 거의 전부 근접방공용 고속자동기관포와 데이터링크를 갖춘 첨단 해상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형 「다카나미」 구축함을 비롯하여 최근 건조함정이 많아 중국에 비교하여 우세한 해상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공군력에서 비교하면 중국이 월등히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예기로는 J-11(Su-27, 30)이 200여대, J-8이 200여대 정도를, 구형기인 J-7계열은 70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J-11은 2010년까지 300여대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 중인 J-10과 FC-1은 Lo급의 신예전투기 및 공격기로 각각 300여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은 J-6을 제외한 전투기 전력이 1,400여대이며 이중 신예기는 400여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점차 구형인 J-6(Mig-19)를 퇴역시키고 신예항공기로 대체 중으로 2010년경에는 1,000~1,500여대의 신예기를 보유한 어느 정도 현대화된 공군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한국공군은 180여대의 F-16과 여러 가지 첨단무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고, 2010년까지 40대의 F-15E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을 뿐으로 현재 한국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심양, 제남, 베이징 군구의 170여대의 J-11과 J-8과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의 전투기 증강계획을 고려하면 점차 열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은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WACS와 장거리 작전을 위한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0년경에나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양의 해상작전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에는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질적으로는 다소 우세한 한국이 한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작전시에 제한적인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동남아에 이르는 원양으로 갈수록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된다.

(2) 군사력 차이에 대한 대응 군사전략

1) 자주국방의 전력기반 조성(ST 전략)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장비와 무기들이 질적으로 우수하여 어느 정도 보완은 되고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선진국 수준의 저예 국방태세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정예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미 의존 전력의 확보와 핵심 군사기술의 개발을 통해 자주적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군은 정찰위성·조기경보통제기·전자광학영상장비 등 정보전력, 통신위성·지휘통제자동화 장비 등 지휘통제전력, 고성능 전투기·장거리 미사일·정밀 유도무기 등 전략형 첨단전력의 대부분을 주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의 장비 및 물자는 자산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40-259억불(약 16조 8000억원-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방위비 증가는 성장 잠재력도 잠식, GDP가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108] 그러나 전략정보 자산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은 우리가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한 이후 핵위협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주한 미2사단의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을 첨단 정밀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 SBCT)」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여단은 고성능 경장갑차량과 정보통신체계를 갖춘 최신예 전투부대이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전력구조 전환 계획에 따라 150개 항목[109]에 걸쳐 110억불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이다.

---

108) 이근석, 전게논문, pp.202-203.

109) 최신예 신속기동여단, 1개 중여단 장비 해상배치,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 신형 정밀 유도 폭탄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한미군의 이러한 첨단 전력을 앞으로 우리가 대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국방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주한미군이 철수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3.1% 수준에서 1.7-1.8배 많은 5-5.5% 수준으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한 언론은 제시하였다.[110]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여 그 대체 전력을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목표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적 핵심 전력 소요를 판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5>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투자 기간 및 소요 예산

주요 확보 대상 전력	수량 및 내용	사업기간	투입예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4대	2005-2007	1조 8000억
공중급유기	3-4대	-2010	2조
차기 유도무기(SAM-X)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도입	2004-2014	1조 9600억
대형 수송상륙함(LPX)	1만 3000톤급 2척 자체 건조	2002-2010	9500억
육군 대형 공격용 헬기(AHX)	36대	-2008	2조
차기 잠수함(KSS-Ⅱ)	18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 건조	2008-2010	1조 2700억
차세대 전투기(FX)	F15K 40대 도입	2008-2010	5조 5000억
한국형 구축함(KDX-Ⅲ)	7000톤급 이지스함 3척 도입	2008-2010	3조
기 타	3000-5000톤급 중급 잠수함(SKK), 경항공모함 등 2010년 이후 도입 구상		

출처 : 이근석,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안보정책의 발전방향」, 2004, p.205.

첫째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무인정찰기 등 실시간 전장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C4I 및 전자전 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구경 다련장, 대형 공격헬기, 차기 보병 전투차량 등 화력 및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고속 기동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형

110) 월간조선 2003-6월호, (서울 : 월간조선, 2003), p.128.

구축함 및 이지스급 구축함, 대형 수송함, 차기 잠수함, 차기 호위함 등 해상 작전 능력 및 고속 입체 상륙작전 능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F-15K 전투기, 공중급유기, GPS 유도폭탄, 차기 유도무기 등 공중 작전 능력과 저·중·고고도 대공방어체계를 보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다목적 헬기, 한국형 전투기,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군사기술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 전력증강 사업들은 다음 <표 4-5>에서 보듯이 막대한 투자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대개의 경우 국방투자는 10-20년의 전력화 선행 기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로운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소요기획 →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생산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10-20년이 소요된다. 국외 도입의 경우는 10-15년이 걸리고 국내 개발은 15-20년이 소요된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10-20년이 걸린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의 첨단 정보·기술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부터 적정 수준의 전력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미 의존이 장기화되고 핵심 군사기술의 해외 종속이 불가피할 것이다.[111]

<표 4-6> 한국의 국방비 배분 실태

구 분	GDP 대비	정부재정대비
1970-1980년대 전반	6% 수준	30% 수준
1980년대 후반	4-5% 수준	25-30% 수준
1990년대	3% 수준	20-25% 수준
2000년대	2.8% 수준	15% 수준
2003년	2.7% 수준	15.6%

출처 : 이근석,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안보정책의 발전방향」,2004, p.206.

국방비 증액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두 가지,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구분된다. 먼저 긍정적인 견해로는 남북 화해·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래 잠재적 위협

111) 이근석, 전게논문, pp.204-205.

대비 '자주적 선진국방' 건설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로는 '동족간의 전쟁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국방비 증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국방비는 1997-2003년간 정부재정은 67% 증가, 국방비는 26%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중 물가상승률 23% 고려시,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은 1997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평가다. 또한 이는 외국과 비교시(2001년 기준) 세계 평균 국방비 부담률인 GDP 대비 3.5%와 세계 분쟁국·대치국 평균인 6.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표 4-7> 분쟁국 및 대치국들의 GDP대비 국방비 부담율

구 분	사우디	쿠웨이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	대만	한국
비 율	14.1%	12.1%	9.5%	5.8%	4.0%	3.7%	2.7%

출처 : 이근석, 2004. 내용에서 필자 재작성.

또한 국민 1인당 국방비는 이스라엘의 1,673달러, 미국의 1,128달러, 싱가포르의 1,044달러, 대만의 472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252달러로 세계 30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재원압박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의 절대 부족으로 전력투자비중 신규사업 비율이 6.6%(1997)에서 3.7%(2003)로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방부는 신규사업 비율은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12] 또한 이러한 국방비의 저하는 방산(防産)물량 축소로 이어져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56.9%(1997)에서 50.3%(2001)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연구 개발 투자비 부족으로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미국 393억불(13%), 영국 40억불(12%)에 비해 한국은 6.6억불(4.5%)로 핵심기술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지연, 군사기술의 대외 종속화 및 방산수출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은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유사법제 정비 등 보통국가화 추진과 동시에 세계 2-3위 수준의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방어 전략 아래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112) 이근석, 전게논문, p.207.

있으며, 정보·전자전 전력과 해·공군 전력 증강 등 군사력 첨단화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전략무기 자체개발 및 러시아제 신형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력의 질적 개선을 통한 강대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 구조 개편과 부대 기동화·경량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전략미사일(TOPOL-M) 추가 배치, 5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가 전 세계에서 군비경쟁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 주변국에 비해 취약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정보 전력은 그동안 한국군이 갖추어야할 가장 시급한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국방 정보화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보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정예 정보화 군'의 육성이 시급하므로 2015년까지 기반완성·핵심체계 구축, 기능 확장·체계 통합, 선진체계 완성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1단계는 완료 되었다.

한국의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미래전장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전력의 확장을 통해 미래전에서 한국군이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군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표 4-8> 국방정보화 기반 구축계획

구 분	주요 내용
1단계(-2005년)	지휘통신체계(C4I), 국방 자원관리체계 등 정보화 기반조성 완료
2단계(-2010)	기능확장 및 체계통합을 통한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3단계(-2015)	모든 국방정보체계를 지식정보화사회 체계로 구축 완료

출처 : 이근석, 2004. 내용에서 필자 재작성.

2) 자주적 전략통제능력 기반 구축(WT 전략)

한·미 관계에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1994년 12월 평시 작전권은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여전히 부여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자주적인 국방능력구

비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자주적 국방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무기체계나 장비 등 군사력의 외형적 성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군사력 운용과 조성의 실질적 기반인 작전기획체계나 전투발전 요소, 또는 군사기술기반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취약점을 무기체계 못지 않게 전략통제능력의 구비를 들고 있다.[113]

전략통제능력은 군사교리[114]와도 관련이 있다. 즉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군사교리, 부대구조 및 무기체계를 편성·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의 군사교리는 대체로 미군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전략 전술 용어집에는 군사교리를 "군부대가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 군사행동(작전)을 유도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육군 군사술어사전에는 "군사이론의 실천체계로서 군사력 운용과 소요의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목적과 수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본질적인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광의의 의미에서의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는 군사이론가 또는 특정국가가 군사문제에 대하여 원리 또는 원칙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한 군사력의 건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이익에 대한 정치적으로 비우호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군의 공식적인 군사교리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연구과제인 것은 대미의존의 안보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주적 전략통제능력에 있어서 현실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13) 이근석, 전게논문, p.211.

114) 교리(doctrine)란 원래 철학적 용어로서 그리스의 철학학파가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의 근간을 표방하는 명제를 일컬었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종교용어로 정착되어 종교상의 원칙이나 교리 및 교법의 도리로서 일정한 종교가 신앙내용의 진리라고 인정하는 신앙상의 교조를 의미하게 되었다.(한국어 사전 편찬회, 1976) 그 후 교리라는 말은 주의나 사상의 핵심원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의 기본원리인 「The Basic Doctrine of Communism」이라고 하여 공산주의 사상이나 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먼로주의(Monroe Doctrine),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등과 같이 정치적인 용어로서는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을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군의 현 전력과 증원능력에 비추어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군의 전략적 통제방법은 6·25전쟁 이후 50년간 변함이 없는 배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전략개념도 서울 북방에서 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인 발전에만 치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독자적인 교리의 개발에 투자를 소홀히 한 점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화에 적합한 미군의 교리를 보완하여 사용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현재의 전략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쟁수행개념을 신속 결정 작전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전력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혁해가고 있다. 그 시험무대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개전 초기부터 미사일과 항공력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병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첨단정밀무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1년 걸프전에서 7.8%, 코소보전에서 35%, 그리고 아프간전에서는 60%에 이르렀으며, 이라크전에서는 70-80%에 달했다.

따라서 전쟁 개념도 한국은 전쟁발발 직후 충격을 흡수한 후 반격 한다는 전략이나, 미국의 전략개념은 즉각적으로 반격하여 적을 격퇴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차이는 미군은 3차원의 작전이 가능하지만 한국군은 2차원의 작전 능력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전시작전권의 환수문제를 추지하는 데 있어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는·먼저 한국군의 전쟁기획 능력, 지휘통제 능력이라는 전략통제 능력의 유무와 다음으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서 전장감시 및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중국은 모택동 시기의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해온 발전전략을 1980년 이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채택을 기점으로 총체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중국은 국가안보 및 발전과 관련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등소평의 「4개 현대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력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분명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중국 위협론의 핵심은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가와 지역질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냉전의 종식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감소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첨단무기를 구입, 개발하는 등 군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정책은 주변 국가들과 지역질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적 역할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세계 제일의 군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 항시 불안한 안보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한반도 환경에서 중국이 국방 현대화로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국방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중국이 국방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작전능력을 확대하며 군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국가들에게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비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다. 특히 군사적 혈맹관계에 있는 북한에게 현대화된 무기 및 군사기술의 지원으로 한반도의 안보불안 증대가 남·북한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해·공군력의 질적 강화는 중국의 작전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 한다. 이는 북한의 무력남침 시 한·미 연합군의 반격작전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중 간 해양에 관한 분쟁요인에 대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압력행사를 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필요성이 대두될 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지역에서 통일된 단일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사라짐에 따라 중국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동북아지역에서 주도적 영향력 행사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 된다면 조선족의 한국인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그 시너지 효과로 소수민족의 독립국가 추진 활동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발생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국가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축으로 국제사회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국방현대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은 물론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대외적인 관계표명에 있어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해 왔다. 반면에 중국 지도자들은 타국간의 이해관계에서 분쟁 해결의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무력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즉,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새로운 위협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북아 주변국의 이러한 위협의 인지로 국가 견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주변 정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적 위기와 환란을 겪었다. 현재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화대에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외교적인 대응전략과 국방정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외교적인 대응전략으로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계 확립과 다자간 안보체계 구축,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국방정책 대응전략으로 국방정책을 발전시키고,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국방개혁의 추진 및 대응군사전력의 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만이 국가의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1) 單行本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국방대학교, 2002.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개혁위원회, 2005.

국방정보본부, 「2000년 중국 국방백서」, 국방정보본부, 2000.

권태영 편저,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젼」,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8.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 고려원, 1999.

민병천, 「평화안보론」, 서울 : 대왕사, 2001.

박두복,「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3.

송대성 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9.11테러사태이후」, 성남 : 세종연구소, 2003.

송영우 편저, 「한중관계론」, 서울 : 지영사, 2002.

신정현 편저, 「21C 한국의 선택 : 국가체제와 정책과제」, 서울 : 우석, 1998.

신현준, 「한국 고대사의 반역」, 서울 : 조선일보사, 2004.

오규열, 「중국 군사론」, 서울 : 지영사, 2000.

육군본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 2006.

이규태, 「현대 한중 관계론」, 서울 : 범한서적주식회사, 2007.

이기종, 「남북한의 국제관계와 안보외교」, 서울 : 동림사, 1999.

이희옥,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 : 폴리테이아, 2007.

정경환,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부산 : 세종출판사, 2004.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 교학연구사, 1999.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 북코리아, 2006.

하영애. 「중국 현대화와 국방정책」, 서울 : 범한서적 주식회사, 1993.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 민족통일 연구원, 1993.

황병무.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서울 : 국제문제연구소, 1997.

2) 論 文

강용배, "민·군간 전략적 리더십 연구사례 분석",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 국제안보환경 변화」, 국제안보전략문제연구소, 2007.

경창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외교 제69호」, 외교안보 연구원, 2004.

곽종근,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동향", 조선대학원 석사논문, 2007.

국방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동향", 「국방부 군비통제 제32집」, 2003.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제3차 한·중 외교안보대화 참가 결과", 국방부, 2007.

김부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중앙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성욱,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비교연구", 동아대학원 박사논문, 2003.

김정익, "중국 군사력 평가", 「주간국방논단 제845호」, 국방부, 2001.

김태호, "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 「전략논총 제9호」, 국방부, 1998.

김태호, "중·러의 반응과 향후전망",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제19회 학술회의」,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2005.

류명현, "중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006.

류현상,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안보구도 : 주변국 군비경쟁 실태 및 한반도 안보과제를 중심으로",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 국제안보환경 변화」, 국제안보전략문제연구소, 2007.

미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 미국방부, 2007.

박건구, "중국군의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005.

박명림, "동북아 시대, 동북아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 「동북아 구상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학술회의 논총 제3집」, 통일연구원, 2006.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세종연구소, 1998.

신 정, "한국의 국방개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방조직을 중심으로", 한성대학원 석사논문, 2007.

오상학, "중국의 국방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원 석사논문, 2004.

유방우, "중국의 국방 현대화가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근석,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안보정책의 발전방향", 인하대학원 박사논문, 2004.
이은득, "국제분쟁의 추이와 남북한 관계",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 국제안보환경 변화」, 국제안보전략문제연구소, 2007.
이정철, "북한의 외무성 성명 이후 정세전망",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 통일연구원, 2005.
이종호, "미·일 신안보체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원 석사논문, 1998.
조영갑, "한국 군사전략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전략적 특징의 정립", 「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 국제안보환경 변화」, 국제안보전략문제연구소, 2007.
주진원, "중국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원 석사논문, 1997.
최경식,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미·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2004년 남성대 포럼, 2004.
하원훈, "중국의 안보정책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004.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 이론과 실체",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1994.

2. 국외문헌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200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onathan D. Pollack, "Chinese Policy toward Korea : A Continuing Dilemma?", *Asia Pacific Defense Forum, Special-Supplement*, Summer 1984.
Tao Bingwei, "Observations on the Korean Situation" *Beijing Review*, no. 38, 1985.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IISS.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National Defence Policy Affected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yeong Keun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presents South Korea's confrontation strategy toward to China military's modernization which is based on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including national defence policy which is external.

Since 1980s, in the China's policy of diplomacy, there was no doubt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was focused because nation's actual benefit was getting significant better than economic ideology. By Deng shao ping drive reformation evolution policy, economic important factor and external opening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s by claiming the national strategy which is economic construction as a 4 modernization.

The main purpose of China's security policy is that stabilization maintenance and securing predominant status in the northeast toward surrounding countries. As a part of it, China is extending own country's influence by participating at 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such as UN, multitude security which is regional and maintaining friendship cooperation with powerful countries which is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to achieving their national goal. Also as increasing of continuos national defence budget, China

is enforcing military force making brand new system power, one side, China is making United States and surrounding countries sense by enlarging soldier interchanging cooperation. In part of military force strategy, China is maintaining their strategy to defeat from far further distance which is result in enlarging information assets and modernization of navy and air force to protect their country by changing from the citizens battle theory to aggressive defence which is under the high-tech.

These changes which can affec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countries' security are following;
first, it accelerate military preparations competition getting among surrounding countries. Second, it causes negative effect to mutual reliance construction and military preparations regulation as military support toward North-Korea. Third, by reason of the Korean Peninsula's strategic worth, China is trying to adhere the Korean Peninsula's division. So Korea has to try to find solution confrontation strategy to keep our security.

Firs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establish peaceful system is mainly leaded by North and South Korea as a part of policy and diplomacy and construct security system with surrounding countries. Also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enforce capability of independent def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o restraint dispute.

Second, as a confrontation of defence policy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make good relation by enlarging military interchange with China and, push on modernization about equipment, weapon, military structure change which is fit on military in the battleground environment through the national defence policy. Also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improve ability of mission accomplish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strategy of confrontation against military. So in the mear future, South Korea have to insurance existence right of nation and citizen from current threat and future of it by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2000s' which has changed dynamically national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nfrontation creative strategy to achieve nation's prosperity and peaceful unification with protecting national profit.